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보다 심층화 되었다. 그동안 중립의 '비판적 평화연구'를 주도해온 갈통은 1996년 저술한 '평화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에서 기존의 평화연구의 논리들을 조망하고 체계화하는 평화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유주의 평화이론'을 제시한 럼펠도 1990년대 이후의 평화연구의 저술에서도 평화질서의 유지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권, 환경, 여성, 해무기 확산,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유네스코를 통한 평화교육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평화연구의 영역도 그만큼 확장되게 되었다.

탈냉전시대의 평화연구의 주요흐름을 조망하는데 있어 먼저 안보문제의 다변화와 다각화를 검토하기로 한다. 안보문제의 다변화, 다각화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가는 영국의 부잔(Barry Buzan)으로, 그는 1991년 오늘날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등에서도 국가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사 분야가 중심이 된 국가안보영역에 이 분야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가안보에 대응하는 개인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sup>39)</sup>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탈냉전시기에 들어와, 국가안보에서 국가생존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국가간 힘의 팽목적 추구현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안보추구가 국가의 구성

39)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김태현 역, 『세계화시대의 국가안보』(서울: 나남, 1995).

추구한다는 특성을 갖는다.<sup>43)</sup> 포괄적 안보는 경제적협력과 지역적노력 그리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을 통해 상호존성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포괄적 안보는 안보에 있어서 군사적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평화적 대화, 경제적 협력, 상호존성 증대, 국가들의 통치능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체제위에서 해당 국가들 간의 협력증진을 도모하며, 결국 군사적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sup>44)</sup>

탈냉전시기에 갈통은 지금까지의 평화연구를 경험주의에 기초한 경험적(empirical) 평화연구, 비판주의에 기초한 비판적(critical) 평화연구, 구조주의에 기초한 구조적(constructive) 평화연구로 집약하면서 평화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평화연구 패러다임은 진단(Diagnosis)-예측(Prognosis)-치료(Therapy)라는 삼각형 구조의 역동성을 적용시켜, 데이터분석과 이론적 예측, 가치적 판단을 토대로 평화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sup>45)</sup> 갈통은 건강 연구에서의 '건강-질병'의 개념처럼 평화연구에서 '평화-폭력'의 개념을 대위시키면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자신의 폭력과 평화의 유형을 확대시키고 있다. 먼저 폭력의 유형은 기존의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외에 문화적 폭력을 추가하고 있다.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되는 직접적인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 요소를 일으킨

43) Janne, E. Nolan(ed),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pp3-18

한용선, 앞의 글, p. 219.

44) 위의 글, p. 223.

45) Johan Galtung(1996), pp. 69-91.

원인 개인들에게 실제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왔던가 라는 반성에서 출발된 것이었다.<sup>40)</sup>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개발전, 국가의 정치 불안정과 빈번한 종족분쟁으로 인해 국가폭력이 무자비하게 개인과 종족을 말살하게 되는 현실에서 안보개념도 국가중심에서 국내문제와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인간개인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고자하는 움직임에서 출발하여, 개인들을 결핍과 공포,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발전된 인간안보문제는 오늘날 유엔과 국제기구, 범세계적 NGO운동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sup>41)</sup> 이 인간안보 개념은 경제안보, 환경안보, 식량안보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개념들을 적절히 포괄할 수 있고, 군사안보 중심적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대체적 효과가 높은 개념으로, 오늘날 많은 평화연구자들의 폭넓은 관심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sup>42)</sup> 탈냉전시기 군사안보영역의 심층화 현상으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와 포괄적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이 등장되었다. 협력안보는 각 국가의 군사체제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관계의 설정을 추구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상호양립 가능한 안보목적 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안보는 상대국의 군사체제를 인정하고 상대국의 안보이익과 동기를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을 추구하며, 전쟁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합의된 조치를 추구하고 침략의 수단을 총동원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적극

40)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2.

41) 한용선, 앞의 글, p. 206.

42) 김명성, 앞의 글.

다.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의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는다. 그 내용에 따라 종교, 법과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과학 등으로 학파, 대학, 미디어 등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형성하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화의 유형은 기존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의 분류에서 적극적 평화를 직접적 평화,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로 세분하였다. 소극적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의 부재상태이며, 적극적 평화 중 직접적 평화는 말과 신체적인 친절로 이루어지며, 자신과 타인의 몸과 마음,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우리들이 기본적인 요구, 생존, 복지, 자유, 정체성에 호소한다. 구조적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균등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강요대신 대화, 분리를 통합으로, 분열을 연대로, 소외를 참여로 대체한다. 문화적 평화는 폭력의 정당화를 평화의 정당화로 대체하는 것으로 종교, 법,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과학, 학파, 대학 그리고 미디어 등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 적극적인 평화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문화적 평화가 형성된다면, 이는 다양한 상대들 간의 공생적이고 동등한 관계와 더불어 구조적 평화를 낳고, 나아가 협력활동이나 우정과 사랑을 통해 직접적 평화를 산출하는 평화신드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46)</sup> 결국 평화는 구체적으로 갈등의 전환이 나 변형을 통해 가능한데 상생(Symbiosis)이야말로 갈등의 가장 창조적 해결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생은 갈등 당사자 모두의 승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피하고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해답

46) 김승채, 이학근, 『평화와 평화상』(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pp. 26-27.



인 것이다.

#### 4. 한국의 평화연구

지금까지 서구지역에서의 평화연구의 주요 흐름들을 정리해 보았다. 21세기인 오늘날 현실에서도 여전히 분단국가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국에 있어서 평화연구는 서구지역에 비해 늦게 조직화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대학의 강단에서 국제정치학 분야를 가르치는 교수들에 의해 전쟁론, 국제관계론, 국제기구론 등의 과목에서 평화론 제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 시기에 주목할 연구자는 자유주의 평화이론가인 럼멜문하에서 학위를 마치고 1973년 귀국한 이상우로, 그에 의해 비로소 서구의 체계적인 평화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했다.<sup>47)</sup> 이 시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45년 결성)가 유엔의 평화운동, 평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의 평화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sup>48)</sup> 한국이 다른 서구국가들에 비해 평화연구의 출발이 늦게 된 것은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분단 상황에서 평화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부담이 가는 현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대는 특히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으로 학위를 마친 연구자들이 대거 귀국하기 시작하면서 구미의 새로운 국제정치이론들이 소개되고 주로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평화문제가 관심있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하영선은 처음으로 1981년 한 논문에서 기존의 서구의 평화연구

47) 이상우, 『럼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서울: 오름, 2002).

4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0년사: 평화를 향한 50년(1951-2004)』(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ESCO, IAO 등 100여개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다.

이 시기 언급한 「국제평화연구소」 이외에 1970년대 이후로 통일과 안보, 평화문제를 다루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경남대학교의 「극동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의 「평화연구소」,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서울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 한양대학교의 「중추문제연구소」, 연세대학교의 「통일연구원」 등이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1989년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은 한국에서의 평화연구의 내용과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sup>52)</sup>

1990년대에 와서 비로소 한국의 평화연구는 국제정치학의 한 연구 분야의 범위를 넘어 여러 학문분야의 학제적인 연구가 가능해진 「평화학」으로 성숙, 발전하게 되었다. 1998년 「한국평화학회」의 창립은 한국의 평화연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한국평화학회」는 200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적극적 후원으로 한국의 평화학 연구와 평화교육의 최초의 기술택스트라 할 수 있는 「21세기 평화학」을 출간하였다.<sup>53)</sup> 이 시기에 주목할 저술은 1997년 최상용의 「평화의 정치사상」이다. 이 책은 고대 이전부터 근대에 이르는 주요 평화사상들을 치밀하게 분석 정리 해 줌으로써 한국 평화연구의 규범적, 가치판단적 토대가 풍부해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평화연구소」는 1999년, '99 서울 NGO대회 및 제18회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그동안 급변해온 국제질서 변동

52) 위호재 외,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서울: 법문사, 1989).

53) 하영선(한국평화학회장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와는 다른 한국 나름의 평화연구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sup>49)</sup> 또한 이 시기에 대학에는 종속이론, 제국주의론, 판로권주의이론, 조합주의이론 등 제3세계적 현실을 분석하는 서구의 이론들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특히 탁월한 평화연구자인 갈봉의 평화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다.<sup>50)</sup> 여전히 평화문제가 국제정치학의 한 연구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던 이 시기에 평화연구의 활성화를 자극한 것은 한 선구적인 평화운동 기였다.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대학총회의(LAUP) 명예회장이인 조영식 경희대학교 총장은 유엔총회가 1981년 11월 30일 '세계평화의 날'을 매년 유엔총회가 처음 개막된 9월 제3주 화요일로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51)</sup> 세계대학총회 운동을 주도하면서 그는 1979년 세계대학총회와 경희대학교 부설의 「국제평화연구소」를 설립하여 평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평화 운동에 필요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왔다. 「국제평화연구소」는 1987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기존의 평화연구, 평화운동, 평화교육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세계평화대백과사전」(World Encyclopedia of Peace), 전 4권을 발간하였다. 1983년부터 시작하여 만4년이 걸린 발간작업에 는 세계 40여개국(사회주의권 포함) 350여명에 달하는 석학들과 UN-

49) 하영선, "새로운 국제정치이론을 찾아서: 평화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 21(1981).

50) 조현석, "평화개념의 현대적 전개에 관한 고찰: J. Galung의 비판적 평화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51) '세계평화의 날'은 조영식의 주도로 LAUP 코스타리카 총회에서 결의되어 정식으로 UN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UN은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하였다. 세계대학총회, 경희대학교 부설 국제평화연구소, 「평화의 연구」(서울: 법문사, 1982), pp. 66-67.

을 반영해 「세계평화대백과사전」을 전 8권으로 증보 발간하였다.<sup>54)</sup> 이 증보판 작업에는 고르바초프 등 여러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스위스 유엔군축문제연구소」 등 세계의 유수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평화연구분야의 권위자들인 노르웨이의 요한 갈통, 조지 모델스키 워싱턴대 교수, 마이클 하스 하와이대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 하였다.

한국은 1987년 6·29 선언을 통한 민주화 달성 이후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출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또한 많은 NGO 단체들이 한국에서도 의욕적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평화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제기 되어 평화연구의 내용이 보다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반전 평화운동, 반핵운동, 인권, 여성, 환경, 대량살상무기,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평화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다.<sup>55)</sup> 특히 2000년 조민이 출간한 「한국사회 평화문화·활성방안 연구」는 평화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평화문화의 창출과 정착의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저술이라 하겠다.<sup>56)</sup>

#### IV. 21세기 평화연구의 과제

지난 세기의 전반기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후반기는 표면

54) <http://www.gcs-ngo.org/data/worldbook.htm>(검색일: 2004.9.9).

55) 각 분야별로 다양한 평화연구 성과들은 김승재, 이학근, 앞의 책을 참고할 것.

56) 조민,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



적으로 강대국 간의 전쟁은 없었지만, 핵무기의 공포와 함께 세계 곳곳에 국지적인 분쟁과 갈등이 빈발했던 냉전으로 얼룩진 고통과 불안의 시기였다. 지난 세기 동안에 나름대로 활발하게 평화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류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탈냉전시대에서도 이러한 분쟁과 갈등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더욱 가공할 수준으로 발전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테러의 위협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급속한 세계화의 도진 속에서 개별 국민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동요되는 가운데 기존의 국가중심의 군사안보의 범위를 넘은 개인·인간 중심의 비군사적인 대안적 안보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 NGO 그룹의 비약적인 성장은 항상 평화연구의 자극제가 되어온 평화운동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켜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평화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과제는 크게 평화문화의 정착, 그리고 평화와 안보거버넌스의 확립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평화라는 가치와 규범을 어떻게 내면화 할 것인가와, 이러한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유지, 관리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 1. 평화 문화의 정착

평화는 국가들 사이에서건 시민사회 내에서건 그 자체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침윤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테면 '문화의 힘'을 통해서만 평화의 견고한 토대구축이 가능하다.<sup>57)</sup> 유엔

57) 조진, 위의 글, p. 4.

따라서 21세기 평화연구의 주요 과제인 평화문화의 정착을 위해 세 부류로 실천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교육이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전략의 핵심에 위치하는 교육은, 평화가 인류의 기본적 가치라는 신념을 강화시키고, 비폭력적 정신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국내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 평화교육은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둘째, 미디어 매체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다. 미디어는 교육과 함께 태도, 판단력, 가치들을 형성하는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평화를 진작시키는데 미디어의 중요성은 국제기구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고 있고 국제기구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수많은 규범적 수단을 채택했다.

셋째, 문화적 다원주의와 문화간 대화 존중이다. 다양한 문화간 대화는 평화건설 전략의 본질적 요소이다.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차별정책, 민족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민족과 이민자와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의 침해 등이 분쟁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세계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관리에 있어 중요하다.<sup>60)</sup> 넷째, 평화 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정리를 토대로 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다. 평화운동은 지속적으로 평화연구에 자극과 동기를 부여한다. 오늘날 NGO의 활동이 여러 부분에서 활발해지면서 평화운동 분야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여러 평화운동의 방향과 실천적 과제

60)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 "평화와 안보의 거버넌스," 하영선, 앞의 책, p. 318.

총회는 1997년에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Culture of Peace)로 선포하였다. 유네스코는 1989년 포프디브와르(Cote d'Ivoire)의 아부수크로(Yamoussoukro)에서 「인간의 마음의 평화에 관한 아부수크로 선언을 통해 '평화 프로그램'(Program for Peace)을 마련하고 1995년부터 '평화문화'를 유네스코의 공식사업으로 채택했다.<sup>58)</sup> '아부수크로' 선언의 골자는 첫째, 생명, 자유, 정의, 연대, 관용, 인권 및 남녀평등 등을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평화문화 개발 둘째, 인간관계에서의 정의 및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공생관계를 확보해 주는 공동정책의 수행 심화 셋째,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평화와 인권의 가치 포함 넷째, 국제적 수준에서 일차적인 환경 보호 및 관리 이다.

유엔이 정의한 '평화문화'는 살아 움직이는 평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일상생활가운데서의 인권존중을 의미하며 평화, 발전, 민주주의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힘이다. 삶의 문화로서 평화문화는 서로 다른 개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서로 나누고 경청하며 보살피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빈곤과 배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평화문화는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공평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평화문화가 추구하는 목적은 전쟁, 폭력, 기만, 차별의 문화를 비폭력, 대화, 관용, 연대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sup>59)</sup>

58) (Yamoussoukro Declaration on Peace in the minds of man) <http://unesdoc.unesco.org/ulis/ged.html> 위의 글 제1인용.

59) (Manifesto 2000), <http://www.unesco.or.kr>

에 관해 탐구 하는 것도 중요하다.

### 2. 평화와 안보 거버넌스의 확립

21세기 탈 냉전시대에 와서 국가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더욱 '승자가 없는 전쟁', '인류 공멸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는 너무나 좁아지고 사람들은 너무나 상호의존적이 되었으며, 무기는 너무나 파괴적이 되었다. 각종 장거리, 대량살상무기들 때문에 국경선을 지키는 국가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국제안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국제관계의 기저에 질게 깔려 있어서 이 때문에 유엔 등이 주권국가의 영토와 자주적 주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범은 한편으로는 국가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체계를 구축하는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했고, 군비를 강조하는 예산 정책이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부추키기도 했다.<sup>61)</sup>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안보문제는 국제 안보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 일 뿐으로 세계 대부분 국가의 안보가 계속 증진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는,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지구자체의 생명유지 체제에 대한 위협, 극심한 경제적 빈곤, 재래식 무기의 격중, 국내의 공포정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중심의 안보의 성격과 내용이 보다 다각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국

61) 위의 글.



체제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국가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수단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 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지구촌이 웃들이 효과적인 집단 안보체제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문명화된 국제체제 정립을 위해 오늘날에도 평화와 안보유지는 모든 면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sup>62)</sup>

따라서 역시 21세기 평화연구의 주요과제인 평화와 안보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 세부적·실천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적정리이다.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오늘날 개별 국민국가의 역할과 입상이 동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국민국가는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있다. 아울러 군사 안보의 심층화된 분야의 상호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그리고 포괄적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도 필요한 과제이다.

둘째, 군축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평화는 군축의 실현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방비의 축소와 군비경쟁의 종식은 평화실현의 첫 걸음이다. 무기이전,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제거, 핵 확산 금지조약의 권위적 운용, 효과적인 핵실험 감시체계 확립,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안보와 지구안보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다. 과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빙자해서 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정책이 빈번하게 실행되었는데,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은 동등한 중요성을

62) 위의 글.

가운데 이르기 까지 모든 인류가 아직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영원한 숙제이다. 지금까지 평화연구의 주요흐름에 대한 분석적정리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문제에 대한 치열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전쟁과 분쟁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세기에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가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준다.

민주주의는 군대의 총과 칼로 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의식으로 지켜질수 있다는 카(E.H.Carr)의 지적처럼 평화도 힘으로 만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성숙한 의식으로 지켜질 수 있다. 오늘날 지구촌(global village)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평화에 대한 의식이 일상생활 속에 내면화 되어야한다. 다시 말해 평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평화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과제는 평화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류의 지혜가 응축된 모든 학문분야가 망라된 더욱 치밀한 학제적 연구와 모든 평화운동 및 평화교육의 상호지속적인 자극과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어 진다.

앞으로 21세기는 평화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여전히 냉전의 외판 섬으로 남아있는 우리 한국은 이 평화의 세기를 이루어 가야할 촉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평화연구자, 평화운동가, 평화교육자들의 진지한 성찰과 성실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 서로 대립적이 아니라고 보며, 기아, 질병, 억압 등의 만성적 위협과 일상생활의 안정을 깨뜨리는 혼란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한다. 지구안보 역시 각종 환경오염,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넷째, 유엔 헌장에 따른 유엔의 제반 평화유지 및 평화 지원 관련 활동 등에 관한 연구이다. 1991년 걸프전쟁의 경우처럼 유엔 다국적군의 무력발동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2004년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강대국의 독선적 판단에 따른 전쟁도 가능해진 오늘날의 현실에서 유엔의 권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기구의 모색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다섯째,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의 윤리적 토대 구축을 위한 연구이다. 오늘날 세계화는 강대국의 독선과 약소국의 희생위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지구적 공동체의 공존과 공영은 평화와 안보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제는 약소국은 물론 강대국까지도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세계화의 보편적인 윤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sup>63)</sup>

### V. 맺음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이 야누스적인 명제는 고대로부터 21세기인

63) Peter Singer, *One-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2).

#### Abstract

##### The Main Currents and Following Problems of Peac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in currents of peace research and to suggest the following problems of peace research in this century.

In analyzing and arranging the main currents of peace research, the periods are divided into Cold War period(1945-1970), Detente and New Cold War period(1971-1989) and Post-Cold War period (1990-present) by using the variables which contain extension of peace concept, development of peace movement and change of international society.

Cold War period saw the formation and demarcation of peace research. It's main currents are American 'traditional peace research' in 1950's that mainly treated war problem and North-European 'critical peace research' in 1960's that raised the question of structural violence by Galtung and German 'Neo-Maxist peace research' grounded by 'critical theory'.

In Détante and New Cold war period, besides East-West conflict, North-South problem was raised as new important issue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peace research was developed to cover the third world countries. In Post-Cold War period, international world order was rapidly changed by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nd the concepts of security were more pluralized and terrorism as a new form of war was appeared. So the scope and method of peace research was more enlarged and developed.

Thus, the process of formation, demar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eace research until a recent date was a process that peace re-



# 평화운동의 이념과 평화연구의 과제

—서독의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李 三 悅  
(新博, 忠貞大 교수)

目次

- I. 평화운동의 정치와
- II. 반핵운동의 이념과 균형이데올로기
- III. 평화의식의 전개과정
- IV. 평화연구의 과제와 방법

## I. 평화운동의 정치화

최근에 와서 평화운동이 급격히 정치문제화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정치가 평화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평화문제가 정치이슈화했다는 말이 아니라 평화운동이 최근에 이르러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본격화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평화운동은 최근의 23여년 간에 사회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위치를 옮긴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물론 모든 사회운동이 물론 정치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아직 정치적 권력관계의 변화까지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평화운동은 이미 명확이슈를 여론화하기 위한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정치적 관계의 변혁을 노리는 정치운동의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 것 같다.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니라 서구나라의 상황을 말하며 그 중에도 특히 우리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진 서독의 경우를

가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히 83년 3월의 총선거이다. 이 선거를 계기로 평화운동을 정책으로 내건 녹색당(Green Party)이 사상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소수당으로나마 진출되어 의회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평화운동의 세력이 커져서 판별이 남모르게 서독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사회당(SPD)이 집권을 했더라면 아마 서독의 국가정책이나, 나라의 국제정치에도 상당한 기류의 변화를 일으킬 뻔 하기도 했다. 사회당이 평화운동의 반핵이슈들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포겔(Vogel) 수상후보가 내놓은 예비내각측에 수상고문으로 지명한 반핵운동가요 평화 철학자인 바이재커(Carl Friedrich von Weigacker) 교수들 임명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참작할 수 있다.

이 선거는 그렇지 않아도 평화운동이 편입이 된 일이었다고 평해왔다. 반핵이슈를 둘러싸고 미소의 추위들이 서독을 방분해 지원사격을 하는 등, 서독의 선거가 마치 서구권과 동구권의 대결상인 것처럼 세계의 선거로 부각되었던 것이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운동이 정치운동화하기 시작한 것은 서독에서 이미 리간징부가 들어서 군비강화안을 추진시키던 81년 2월부터 기술러 볼 수 있다. 세로 개 발된 중성자탄을 유럽에 배치하겠다는 리간의 발표에 대해, 이제까지 잠재적으로 품고 있으면서도 유럽과 서독의 안보라는 기상명령 앞에 감히 표현할 수 없었던 거부반응을 노골적으로 서독의 정사가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각지에서 반핵운동시위가 벌어지고 반핵토론회, 강연회가 연이어 일어났다. 교외에서 반핵에배가 개회되고 반핵평화운동은 일부 지식인 대학생 운동에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번져 나갔다. 리간의 서부방문을 계기로 본(Bonn)에서 개최된 81년 10월의 반핵데모에는 약 40만명의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 왔고 어린으로부터 노인들까지 노동자, 학생, 정치인들 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의 국민적 기사였다. 당시의 집권당인 사회당의 국 회 지도자들의 인사들이 다수 참가했고 이로 인해 슈미트 수상과 브란

트 당수가 의견충돌이 생기는 등 정치문제가 생겼고 국민학교 아이들도 귀기 선생님과 함께 수입을 빠지면서 전세비를 내어 본에까지 밀려오는 등 거국적인 열기가 드세게 내뿜어 올랐다. 몇 주 뒤에 일어난 화란의 임스델담과 영국의 런던시위에서도 각기 30만명 이상이 동원되어 반핵평화운동은 유럽전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로부터 평화문제와 반핵문제를 주이슈로 들고 나온 녹색당이 지방선거에서 차츰 특세하면서 주의회에 하나씩 들쭉 진출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반핵평화운동이 정당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삶」을 부르짖는 인간주의 운동이며 종교적인 성격마저 띤 운동으로 차츰 인식을 바꾸어 가는 듯이 보이고 있다. 교회 목사들은 평화이슈를 가지고 가두에 나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당 앞뜰에서 평화를 위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 등 간접적인 시위마저 벌이고 있다.

평화운동을 주도해온 녹색당은 사상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하여 비록 소수당이지만 큰 세력이선을 일으키고 있다. 녹색당은 이념적으로 다양하며 반핵평화 운동자들 뿐 아니라 환경보호운동, 새로운 공동체운동, 여성해방운동 등 다양한 연원을 가진 복합체이다. 이들은 대체로 60년대의 학생운동과 반권위주의운동, 그리고 반문화적인 히피운동과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문명의 팽배에 반발하여 합리주의의 과잉 발전속에서 인간의 감성과 삶의 원동력이 억눌리고 감소되어간다고 부르짖는 비판정신의 소유자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한 이래 국회의 풍경도 몹시 달라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청바지에 세타를 걸치고 회의장에서 연설을 하는가 하면 어느 여성국회의원은 아끼까지 안고 국회에 출석하는 등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평화이슈와 함께 파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화운동은 한때 사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좌익운동으로 이단시되었던 때도 있었다. 엄연히 전사가 아닌데 평화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고, 적이 자꾸 무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군비를 줄이자는 하는 사람은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다. 폭은 현실















다시 않은 채, 평화부재의 조직적병리를 그대로 두고서, 전쟁  
한, 기본문제를 기술적으로 컴퓨터가 계산하게 만드는 식의 연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의연구는 폭력과 분쟁, 전쟁이 일어나는 국제질서와 국내사회  
를 일단 평화부재의 조직화(organisierte Friedlosigkeit)라고 규정  
조직화된 평화부재의 체제를 어떻게 평화적인 세계로 만들어 갈 것이  
규화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과제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연구의연구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도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1)  
과학적인 연구에서 종합과학적인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해야  
한다, 2)가치중립적인 행동과학적 연구에서 가치관을 가진 참여의 학문이  
해야 하며, 3)현실분석적인 연구에서 미래지향적인 연구인 미래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가로 유명한 Georg Picht는 평화부재의 연구를 미래학이라고  
정하고 여기에 유토피아적인 진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서  
[유토피아에의 용기(Mut zur Utopie)]에서 Picht는 "오늘의 과학기술세계  
에서 모든 유토피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토피아는 평화의 유토피  
피이다"라고 강조했다.

평화의 유토피아는 세계가 가진 기술적 평화부재의 체제를 이에 전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체제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Picht는 평화연  
구가 단순한 윤리적 요청에 머물지 말고, 1)과학 기술세계속에서의 평화의  
주진을 탐구하며, 2)평화가 제수 보장될 수 있는 미래세계의 사회구조의  
대강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한다. 그는 현재의 기술세계가 실  
인하리 만큼 제한된 가능성밖에 없는 세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에너지,  
복식등의 자원이 제한되어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세계의 파멸적 위기  
를 막기 않도록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군  
비축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교육에의 투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한다. 결국 평화연구는 평화가 보장되는 미래사회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나가가 된다.

결국 평화연구의 과정은 전쟁의 위협이 없고 평화가 보장되는 미래사  
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다. 평화가 보장되는  
란 Johann Galtung이 정리한 것 같은 "폭력의 위협이 없고 전쟁이 없는 사  
회"라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으로서는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은 평화가 깨뜨려지지 않을 사회구조의 확립, 즉 정의와 자유의  
발전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구조의 확립에서만 찾아질 수 있겠다. 불공  
사회구조와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가 있는 곳에서는 결코 진정한 평  
는 존재할 수 없으며, 강요된 침묵이나 억압에 의한 인정은 위장된 평화인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는 정의와 자유, 인권 등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1)Georg Picht, Heinz E.Tödt, Studien zur Friedensforschung Bd 1-12,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 2)Erhard Eppler, Wege aus der Gefahr, Rowohlt, 1981
- 3)Dieter Senghaas, Friedensforschung und Gesellschaftskritik, Fischer Verlag, 1983.
- 4)Bernhard Moltmann, Militarismus und Rüstung, Forschungstate der Evangelischen Studiengemeinschaft, Heidelberg, 1981.
- 5)TohannaVogel, Kirche und Wiederbewaffnung, Göttingen, 1978.
- 6)Franz Alt, Frieden ist möglich, München, 1983.
- 7)Alfred Machterheimer(hrsg), Don Atomkrieg führbar und gewinnbar machen? Rowohlt 1983, rororo aktuell 5247
- 8)Alba Myrdel, Falschepiel mit der Abrüstung, Rowohlt 1983, rororo aktuell 5241.

#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인간안보, 세계평화운동

김 두 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요약—

처음에는 단순히 전쟁 부재에 대한 이해로 시작된 평화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을 다 수용해야 할 만큼 다양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평화 개념은 혼돈스런 개념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역사적으로 평화운동은 평화 구축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갈등적 체제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평화운동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요인은 무엇보다 전쟁이라는 변수이다. 뉴테러리즘 이후 평화운동의 우선 순위는 전쟁의 종교적 담론화에 맞설 수 있는 '담론 구성'이 우선과제라 하겠다. 평화운동은 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해될 수 없는 담론을 화해할 수 있는 담론으로 흡수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 이전의 평화운동은 운동이 중요시되었으나 이제는 '문명 충돌론'의 우세를 잠재울 '대안 담론'(counter-discourse)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 I. 서론

평화의 개념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不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평화에 대한 논의는 전쟁과 폭력을 배제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점차적으로 평화의 의미는 전쟁 이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평화의 논의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여 종전에 잔해 평화와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이를 들면, 광범위한 평화의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의 평화 운동은 1990년 이후에는 성적 권리(sexual rights)의 쟁점까지 포함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sup>1)</sup> 이런 맥락에서 살펴 보면, 인간의 삶의 대다수의 모든 쟁점이 다 평화의 문제로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평화의 정의는 불가피하게 다양하게 정의되고 해석되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론적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어떤 형태의 행동과 조치가 다 가능하며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운동은 평화와 무관한 운동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역으로 평화라는 미명하에 실제적으로는 반평화적 운동이나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평화라는 담론의 전개는 극단적인 상황, 예를 들면 9·11 테러와 같은 뉴테러리즘과 이에 대응하려는 미국과 강대국의 반테러리즘적 제반 행위도 평화의 이름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되었다.<sup>2)</sup>

이러바 평화의 개념의 애매모호성을 뛰어 넘어서, 혼돈을 유발시키

1) Leonore Tiefer, "The Emerging Global Discours of Sexual Rights,"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8(2002), pp. 439-444.  
2) 김열수,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균열," 「국가전략」, 제3권 3호(2002); 안병진, 「9.11 테러와 미국의 외교노선: 연속성과 단절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권 4호(2003); 이현경, 「국제사회의 테러유형, 동향과 국제안보환경」, 「평화연구」, 제11권 3호(2003); 채재병, 「국제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12권 2호(2004) 참조.

50.1 국제평화 창간호(2004. 12)

것이다. 그리고, 국제평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 성격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 논의의 현실적 적실성을 위해 평화연구 및 평화운동이 21세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전지구적 사건 - 예를 들면 9·11 테러리즘 이후 - 이 전통적인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평화운동의 현 시대적 과제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II. 평화의 개념구상(peace concepts)

우선 평화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전쟁과 관련되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쟁부재의 삶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평화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전쟁 혹은 전쟁과 관련된 개념들이 새롭게 정의되면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드러내게 되었다. 예를 들어 냉전 및 그 이전의 역사적 시기에서 "안보"의 의미는 전통적인 군사안보관계에 국한되어 이해되었다. 즉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양극체제가 와해되면서, 안보라는 경협은 상당히 확대하여, 냉전의 전지구적 안보 개념으로부터 지역적 범주로 좁혀져 갔다. 추국가적 위협이란 것도, 그 이전에 언급되었던 군사안보적인 의미에서 벗어났다. 세계정치의 관심은 그 이전의 비안보적 쟁점이었던 민간적인 쟁점에 더 큰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sup>3)</sup> 각국의 정부는 발당전하에서는 비(非)안보적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3) Ibid., p. 12.

는 세계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를 이해하고 논의하는데 가장 먼저 봉착하는 문제는 평화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마치 국제정치 혹은 국제관계 이론에서 여러 현상과 개념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시각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주의적 접근에서는 전쟁이나 안보의 문제는 다분히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ly constructed)된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sup>3)</sup> 이처럼 평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는 곧 평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불가피한 연관이 있다. 평화의 개념 구성은 후속적인 평화운동의 성격과 방향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평화 운동의 성격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서, 현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 보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사회의 변화로 현 시대의 평화운동이 반전 문제에 있어서 사회주의 종언 이전의 '이데올로기 시대'의 평화운동에 비해 더욱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을 인지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역사의 종언'의 담론으로부터 '문명충돌론'으로 필사이드로 확장할 경우, 다시 말해서 평화운동이 종교적 담론에 연계될 경우 평화운동의 실효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먼저 평화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3) G. John Ikenberry and Andrew Moravcsik, "Liber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Security in Northeast Asia," Conference on Security and Securitization: How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re Securitized, Hosted by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Korea University Sponsored by the Ford Foundation, Millennium Seoul Hilton Hotel, Seoul, Korea(January 30, 2004), pp. 10-11.

51

이런 맥락에서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개념은 본래적 개념에서 벗어나 상당한 정도로 무제한적 혹은 무각위로 정의될 가능성도 내포하게 되었다. 이처럼 실제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유사한 단어에 대한 이해는 종종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평화의 정의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또한 평화라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

1. 평화 개념의 고찰

평화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열망해 왔던 조건이다. 그러나 그러나 평화를 달성하기란 매우 도달하기 힘든 목표이기도 하다.

1900년대와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은 직접적인 폭력으로부터 간접적 혹은 구조적 폭력으로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다. 후자의 개념은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체계를 통하여 사회에 도입된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라는 대비와 또 다른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했다. 소극적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부재하는 상태 혹은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즉, 실제적이고 조직적인 군사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레이몬드 아론의 정의에 의하면, "정치적 단위체간의 폭력적 쟁쟁의 방식이 다소간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sup>5)</sup> 갈통의 정의는 전쟁과 평화 혹은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즉 평화란 전쟁

5) Raymond Aron, *Peace and War*(New York: Doubleday, 1966).



혹은 조직적 폭력의 부재할 때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 시대의 평화(Pax)라는 것도 로마 군단의 법률적 장치 혹은 군사적 힘에 의해 유지되었던 '비저항'의 상태, 묵종, 및 외부적 폭력의 부재라는 의미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억압이라는 회생을 치르고서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6) 소극적인 평화의 문제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전쟁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태를 평화상태로 간주할 수 있느냐 라는 점이다. 7)

(표 1) 평화의 정의: 차원과 세부 영역

평화의 차원	평화의 세부 영역
개인의 평화	1) 자기존경 2) 사랑, 용기 및 희망의 내적 자원
개인간(Inter-personal) 평화	1) 타인에 대한 존경 2) 신뢰, 보살핌, 정의의 관계형성
집단간/국가적 평화	1) 국가내의 다른 집단에 대한 존경/신뢰 및 관심의 관계형성 2) 정의(正義) - 압제와 차별의 부재
국제적/전지구적 평화	1) 다른 국가에 대한 존경 2) 전세계 인간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관심의 관계형성 3) 정의(正義) - 국가간의 비착취적인 관계형성
인간과 지구간의 평화	1) 자연환경에 대한 존경 2) 인간에 의한 지구보존적 삶의 영위 - 단순한 삶의 양식을 보존하고 지향하는 것

\* 출처: Loreta, N. Castro, "Peace and Peace Education: A Holistic View," in Choue(1999), p. 170 도표를 재작성

6) David P. Barash, "Historical Views of Peace," in Choue, Young Seek(ed.)

다른 한편으로 요한 갈통(Johna Galtung)에 의해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것은 '구조적 폭력의 부재'로 재정의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회적 및 문화적 제도로부터 연유되는 억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평등, 혹은 심리적 아이덴티티를 거부하는 구조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8) 이러한 예들은 곧 빈곤, 기아, 정치적 탄압, 환경피해, 성적 차별, 정치적 압제 등을 의미한다. 시대적으로는 고대 이집트 혹은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 및 폭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반란이 거의 없었고, 장기간 전쟁이 부재했던 시기였지만, 그들의 평화는 기껏해야 소극적인 평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갈통은 구조적 폭력하에서, 그러한 구조적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선한' 사람 내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사실이다. 즉 개인들은 그 구조적 속에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규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인간들에게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는 구조(setting)에 무의식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9) 소극적인 평화는 평화를 지키는 것(peace-keeping; 예, 전쟁방지),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peace-restoring, 예, 전쟁이 발생했을 시)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적극적인 평화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peace-

(1999),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New York: Oceana Publications, Inc and Seoul: Seoul Press), p. 201.

7) 김승재, 이화근, 『평화와 평화상』(서울: 서울평화상 문화재단, 2004), p. 19.

8) 갈통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는 개인적인 폭력이지만, 수많은 남성들이 수 많은 여성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게 된다면 이는 구조적 폭력이 되는 것이다.

9) Johan Galtung, "Twenty-five years of peace research: Ten challenges and respons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2(1985)참조.

building), 즉 조화롭고 비착취적인 사회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나아가서 평화구축의 노력이란 전쟁과 무관하게 이러한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키스트로는 평화의 개념을 확장하여 여러 차원에서 가능한 평화의 문제를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1 참조) 이는 앞서 언급한 평화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체계적으로 평화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다. 키스트로는 평화를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1) 개인의 평화(자기 존경/사랑, 용기 및 희망의 내적 자원) 2) 개인간 평화(타인에 대한 존경, 신뢰, 보살핌, 정의의 관계 형성, 3) 집단간/국가적 평화(국가내의 다른 집단에 대한 존경/ 신뢰 및 관심의 관계 형성/ 압제와 차별의 부재) 4) 국제적/전지구적 평화(다른 국가에 대한 존경/전체 인간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관심의 관계형성/국가간의 비착취적인 관계형성, 5) 인간과 자연간의 평화(자연환경에 대한 존경/인간에 의한 지구 보존적 삶의 영위/단순한 삶의 양식의 보존과 지향, 등으로 평화 개념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우트네는 평화의 개념에 대하여 페미니스트적 인 관점에서 공식적(organized)폭력과 비공식적(unorganized) 폭력의 의미를 크게 분류한 후, 두 형태의 평화를 각각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즉 소극적 평화를 개인적 폭력, 신체적 폭력, 직접적 폭력의 부재로 보고, 1) 비공식적 측면에서 아내의 구타, 강간, 아동 학대 등의 부재, 2) 공식적인 측면에서 전쟁의 부재를 평화로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평화에서 1) 비공식적인 측면을 삶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평등의 부재, 기회와 자기 성취의 자유를 박탈

하는 구조적 억압의 부재, 2) 공식적인 차원에서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한 나라내에, 나라간에 구축된 경제구조의 부재, 오염과 방사능 방출에 의한 자연 손상의 부재, 자유 언론과 노조결성에 대한 억압의 부재로 설명하고 있다. 10)

## 2. 평화와 인간 안보

탈냉전 시대의 도래로 평화의 관점은 냉전시대의 평화연구의 대상과 방법과는 달리 나타나기 시작했다. 핵전쟁의 공포 및 전쟁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 무기에 의한 전쟁발발 위험성이 악화되면서 평화의 문제는 전쟁방지라는 본래적 의미에서 벗어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일 것이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국가안보, 혹은 군사 안보는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보다는 제약해 왔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이 속한 국가 혹은 정부에 의해 국민들의 안전 혹은 생명이 위협받기까지 한다. 11) 국가안보는 인간 안보를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

10) B. Brock-Utne, Feminist Perspective on Peace and Peace Education(New York: Pergamon Press, 1987), p. 47; Loreta N. Castro, "Peace and Peace Education: A Holistic View," in Choue Young Seek(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p. 165참조; 강양희 외, 『한국여성 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원』(한국여성개발원 2000년 10월) 참조.

11) 1990년-1999년 사이에 정부에 의해 죽은 사람들이 약 1억 7천 4백만명에 이르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보고에 의하면 2000년 말 현재 세계 192개국 중에서 107개국 3억 6천여명이 제한된 자유만 보장되거나 자유가 전혀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신화, 『탈북자와 인간안보』, 『사상』(2001년 여름호), p. 199.



으나 국가 내에서 갈등이나 분쟁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만으로 인간 안보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sup>12)</sup>

인권 개념이 천부인권에 기초한 선인적 의미라고 본다면, 인간 안보 개념은 인권을 보호할 주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인간안보라는 용어는 1994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연례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되는 '인간개발보고서'(the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의 발표를 계기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인간 안보 개념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영토를 지킨다거나 외교정책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핵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것 등의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안보가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이럴 경우 인간안보의 주요소는 공통 관심, 상호존성,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의 효과성, 인간중심성 등이며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적, 공동체, 정치적인 구체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3)</sup>

나아가서 인간안보의 개념은 탈냉전기의 안보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대 속에 종래의 국가안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인간안보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반작용의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형적으로 국가안보는 국가를 보호하는 것, 즉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에, 인간안보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하겠다.

12) 장양희 외, 앞의 글, pp. 16-17.

13) 위희철, pp. 18-19.

유럽연합에 인간안보기금(Trust Fund for Human Service)을 설립하고 20만 달러를 기부하고 이어 2001년 8월에 721만 6천달러를 추가 지원하였다. 2003년 2월 현재 일본은 NU에 기탁한 기금은 총 1억 7천만 달러에 이르러 세계최고 기록하였다.<sup>15)</sup>

나아가서 인간안보는 개인 단위의 인간안보에 대한 최소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주제는 인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화의 결과로 국민국가와 시민사회가 국민 또는 시민에 대해 안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코소보 사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해 국제사회는 인권, 핵, 환경문제의 현안 문제에 대해 주권을 넘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비록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현재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한 기준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폭력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violence)의 선언이다. 그리고,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담(NU Millennium Summit)에서 인간안보위원회(Commission for Human Society)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인간안보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을 하는 '제도적' 근간이 마련된 것이다.<sup>16)</sup>

15) 위희철, pp. 36-37.

16) 이정욱,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간 안보: 한국 기준은 여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2004), pp. 201-202.

국가가 당연히 개인들의 안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사실은 국가의 힘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가 개인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안보와 국가 안보는 명백히 상충되는 긴장관계 내지 제로-섬의 관계로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sup>14)</sup> 예를 들어, 아시아의 환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기초로 한 IMF 혹은 세계은행의 조치에 따라 한국정부의 긴축정책은 어느 정도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대량살상 사태의 유발로 생기는 인간안보의 위기는 역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인간안보 개념은 학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정책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현실화에 여러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로 대표적인 예는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UNDP의 정의와 비교하여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단지 인간안보를 국가안보의 대체개념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인지뢰 금지를 규정하는 오타와 협약(the Ottawa Convention)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등도 대인지뢰 금지, 전쟁이나 무력분쟁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호 등 인간안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경우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훨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1993

14) 정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 44권 1호(2004), pp. 40-41. 인간 안보의 개념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안보 개념이 자칫 국가주권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 즉 인권을 위해 '주권을 넘어' 이루어지는 군사개입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최근의 예로 부시정부의 이라크 개입의 정당성을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인간안보의 논리가 자주 거론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II. 평화운동의 기원과 국제평화운동:

#### 주요 국가 및 한국을 중심으로

##### 1. 평화운동의 기원 및 발전

사상적인 의미에서 보면 평화운동의 기원은 종교적 기원에서 비롯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첫 3세기 동안의 평화지상주의가 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시기는 예수의 부활승천 이후부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시기(313년)까지를 지칭한다. 평화지상주의(Pacifism)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폭력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보다 큰 폭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작은 폭력도 결코 용인될 수가 없다. 이것은 폭력이 집단화된 전쟁에 대한 반대 뿐만 아니라, 살인과 살상을 반대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지상주의도 근본적으로 동기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시대적으로 처한 상황에 의해 하나의 집단운동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로운 전쟁(Just War, bellum justum)의 평화론은 중세기 역사 전체를 통해 기독교 세계의 표준이론이 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기를 지배하던 정의로운 전쟁론은 호전적인 정복주의적 십자군 전쟁으로 나아가면서 기독교 내부에서 다시금 전쟁 아닌 평화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만들었다.<sup>17)</sup>

19세기의 평화운동은 정부의 외교정책 혹은 군사정책을 수정토록 하

17) 박종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평화사상과 평화운동," 최상용 편, 「현대평화사상의 이해」(서울: 한길사, 1992), pp. 87-118.



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범치주의적 민족국가의 시민들에 의해 평화운동이 주도되었다. 물론 평화협회의 이데올로기와 전략은 계급, 성(gender), 종교적 연계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 그 양상을 달리 했다. 그들은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압박한 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세계질서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도록 동시대인을 교육시키는 일 등으로 평화운동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1815-1816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과 미국에 "평화의 친구"(friends of peace)라는 평화단체가 설립되었다.<sup>18)</sup>

따라서 근대적 의미의 국제평화 운동은 '세력균형' 정책이 여전히 주요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국제평화운동은 국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전쟁이나 몇몇 강대국의 결정과 간섭이 아닌 유럽 국가 간의 협약, 중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1815년부터 영국에서는 1816년부터 각각 평화협회가 들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848년초까지 각국에서의 평화활동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고, 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최소한 1848년까지 국제평화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에 1843-1863년 동안에 개최된 일련의 국제평화대회(Congress of Nation for International Peace Movement)를 통해 평화운동은 비로소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을 1848년부터 주도한 지도자들 중에서 주요한 인물로는 리처드 콥든

18) Sandi Cooper, "Peace Movement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Choue, Richard Cobden (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1999), pp. 349-386.

(Richard Cobden, 1804-1865)을 들지 않을 수 없다.<sup>19)</sup> 그의 역할은 각 평화운동협회의 지도자들과 서신교류 및 직접적 조언을 통해 제시된 원칙과 방향이 궁극적으로 국제평화대회에서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평화운동이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sup>20)</sup>

20세기 후반부터는 평화 및 평화적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제도는 사적 혹은 공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해, 때로는 양쪽의 공동주도에 의해 탄생되었다. 초기의 기관들은 북미,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설립되었다. 특히 오슬로의 국제평화연구원(PRIO,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그리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는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진 연구소이다. 전자가 사설 연구소임에 비해서, 후자는 국제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이었다. 초기의 평화연구는 윤리적이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정부간 기구, 특히 UNESCO로부터 지원되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평화연구 기관과 프로그램은 대학내에 설립되었다. 미국의 경우, 평화 및 평화연구 기관의 확대와 함께 미국평화연구소(USIP,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출현은 더욱 주목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은 연구소의 이름에 '평화'라는 명칭이 공공연히 들어갔고,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연구기금을 지원받는 연구기관이 되었기 때문이다.<sup>21)</sup>

19) 여기서 리처드 콥든이 평화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로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 두 가지 시각이 있음을 먼저 주지해야 할 것이다.

20) 최현미, "리처드 콥든(Richard Cobden)과 19세기 국제평화운동과의 관계," 『대구사학』, vol. 72(2003), pp. 349-386.

21) Peter Van Den Dungen & Lawrence S. Wilmer, *Peace History: An*

림의 평화운동의 역사와 배경은 나라마다 상이하지만 대개 19세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당시의 평화운동은 왕정과의 대립 운동에서 시민사회의 보호를 위해 나타났으며, 이 평화운동은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영향력에서 미약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들은 징집 거부 운동을 벌였으나 평화운동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히틀러 나치의 집권 이후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평화운동은 침체기에 빠졌다. 50년대초 독일의 평화운동은 산발적이었으나 1956년 NATO 가입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었다.

영국에서는 1958년 조직된 "핵무기 감축을 위한 캠페인"(CND,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이 평화운동의 주축이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들이 발전하면서 평화운동은 상대적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에서도 50년대말 영국의 CND의 영향을 받아 여타 평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평화운동의 중심점을 다시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평화운동 자체는 여타 다른 사회운동과는 달리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무렵 반전운동은 주로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학생운동의 영향력은 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한 것이었다.

침체를 면치 못하던 평화운동의 성격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독일의 경우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보수당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시민당이 집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평화운동은 갑자기 성격변화를 일으켜 평화운동 그 자체보다는 급진적인 좌파와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한 테러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평화적인 수단 보다는

Introduc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40:4(2003), pp. 371-372.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사회개혁의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입장은 매우 단호한 것이었고, 비상대권 발동을 통해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운동은 직접적인 대중적인 운동의 형태에서 학문적인 연구작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과 함께 영국의 CND도 평화운동의 지지세력을 동원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대중동원 보다는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로 변신하게 되었다.<sup>22)</sup>

그러나 1970년대후반부터 다시 영국과 독일에 평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여 NATO는 구소련의 SS-20에 대항하여 Pershing II 중거리 미사일, 중성자 폭탄, 크루즈 순항 미사일 등 최신에 무기를 배치한다는 정책을 폈다. 이에 대한 반대 시위는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어 CND의 활동도 활성화되어 1982년에는 무려 25만명 이상의 회원으로 증가하는 평화운동의 열기를 드러냈다. 1980년대 유럽에서의 평화 운동은 그 규모와 동원력에 있어서 훨씬 조직적이었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냉전체제의 붕괴로 평화운동은 다시 약화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평화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평화운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냉전의 상황에서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어 미소 양진영이 원폭 및 수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가 전쟁의 위기로 질주하는 상황에서, 지식인들의 아인슈타인과 같은 지식인이 동참하는 평화운동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48년 폴란드의 우로크라우

22) 차명재,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성화 가능성,"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4호(1994), pp. 217-214.



에서 '평화 옹호를 위한 세계 지식인 회의', 다음 해 3월 뉴욕에서의 '세계 평화를 위한 문화인. 지식인 회의', 이어서 4월의 '평화 옹호 세계 대회'가 연이어 열렸고, 많은 과학자들이 동참했다. 이들 과학자들 사이에 평화운동의 방식과 전개의 차이가 있었다. 이들 과학자들의 평화운동에는 미국의 완곡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오펜하이머, 동일한 위상의 과학자라 할 수 있는 소련의 사하로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과학자들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평화정책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로프의 평화운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급기야 소련연방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탄생으로 이어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25)</sup>

여기서 우리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평화운동의 현황과 성격을 사례별로 살펴 보고자 한다.<sup>26)</sup>

## 2. 주요 국가별 평화 운동의 성격

### 1) 유럽의 사례: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벨지움

#### (1) 영국: CND

영국의 평화운동은 1960년대 - 60년대초 냉전의 상승 기류를 타고 현실협약 해무기 제조의 경쟁의 와중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나

25) 오진근, "전쟁과 과학자의 평화운동," 『과학사상』, 15호(1995. 11월), pp. 150-152.  
26) 평화운동의 역사적 추세의 관련하여 유럽국가들 먼저 언급한 이후 여타의 국가들 설명할 것이다.

1980년대 냉전체제의 종언과 함께 거의 종식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01년 9·11 테러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반테러리즘과 이라크전 참전을 계기로 새로운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라크전은 EU 국가내의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전 불참의 국가군과,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연합국간의 대결 국면으로 나타나는 큰 이견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급기야 EU 주요 유럽회원 국가들간의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평화운동의 모체였던 CND는 전후 영국 시민운동 단체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잘 알려진 저항단체(protest group) 이었다. 평화운동의 시작 시기였던 50년대 CND는 보수당 정부의 방위 정책중 특히 핵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출 과정에서, 노동당의 우의지도 부와 당내 좌파 진영간의 갈등, 그리고 당좌파 내부의 분열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영국 평화운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CND는 결국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해무기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CND는 실패한 사례이며, 특히 노동당 정치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CND는 운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비정치성과 단일 이슈에 대한 집착하는 집념을 보여 왔다. 그러나 평화운동으로서의 CND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힘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sup>25)</sup>

고세훈에 의하면, CND 운동은 초기부터 도덕적으로 유발된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증장기 운동의 형태를 유지하

25) 고세훈, "영국의 평화운동: CND의 부침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8호(2002 겨울호), pp. 141-165.

고, 또한 이테올로기적 '협'의 형성이 어려웠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테올로기적 분석과 연계가 부족했고, 나아가서 노동운동과 세계 평연계가 없었다는 점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화운동이 고립된 단일 이슈 운동에서 벗어나 실천과 이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고립된 단일 이슈 운동에서 벗어나 실천과 이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단순한 평화주의 혹은 도덕적 주장에 머물수 만은 없다. 무엇보다 국내, 외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포함한 체제차원의 분계제기와 비핵운동과 필연적 관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냉전 소멸 이후에도 영국의 평화운동이 핵문제를 넘어서서 제 3세계의 전쟁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그 관심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up>26)</sup>

사회운동과 평화운동은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운동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는 상남이 반체제적인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평화운동은 이익단체의 로비활동과 같은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쪽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화운동은 기성제도에 상당히 열마간 통합이 되어 있다.<sup>27)</sup> 그러나 여기서 평화운동이 본래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탈이테올로기적인 양상을 띠게 됨으로써 진정한 평화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26) 위의 글, pp. 166-167.

27) 강명세, "네덜란드의 신정치운동: 평화운동," 『경제와 사회』(1996 여름호), pp. 96-97.

것이러는 전통적 인식의 경향에 비해, 위의 주장은 평화운동의 현실적 업적과 성취의 면을 강조한 나머지, 평화운동의 이테올로기성과 정치성의 연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제 제기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2) 독일: AK

과거 역사적인 측면에서 독일에서 1860년에서 1890년 사이에 평화운동은 의회에서도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활동을 거두지 못했고 별로 일반인의 의식속에 정착되지 못했다. 반면에 독일 외부에서는 민족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전되어 확실한 절차를 확립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비스마르크 시기의 독일을 살펴 볼 때 평화정책적인 사고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본다. 그것은 유럽이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보다는 동맹학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8)</sup>

탈냉전이후 독일의 통일은 근본적으로 사회운동 부문을 크게 변형시키지 못했다. 사회운동의 저항활동은 통일이라는 평화적인 혁명 기간 동안과 그 이후의 기간 동안 몇가지 동기 유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치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견고한 하부조직과 상당한 수의 추종자들에게 의해 다시 모멘트를 찾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사회운동은 상당히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편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의 사회운동과 비교하여, 그 이후에 나타나는 후속의 사회운동의 양상은

28) 강미현, "Bismarck 시대 독일의 평화운동과 제국창건이 유럽에 미친 영향," 『부산사학』, vol. 23(1992), pp. 246, 281-282.



결실한 조직을 기반으로 공공의 토론과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sup>29)</sup>

독일은 70년대 후반부터 여러 평화 운동 단체들이 조직되면서 평화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특히 독일은 동독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유럽의 어느 국가에 비해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었다.<sup>30)</sup>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보수 정권이 등장하고,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사회경제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평화운동은 그 열기가 식게 되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기독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단체를 가진 단체들이 모인 AK가 조직되어 특히 본에서 평화위치를 주관하였다. AK는 일종의 협의체로 독일전역의 대규모 시위만을 관장하였다. 이들 조직은 2천여개 이상의 지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0% 이상은 10 여명 내외의 군소 평화운동단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주요 몇 개의 정치집단 및 종교조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의 경우는 Pax Christi와 같은 카톨릭단체가 평화운동을 참여한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신교가 평화운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독일의 개신교는 50년대 이래 독일의 재무장, 핵무기,

29) Dieter Rucht, "The Challenging Role of Political Protest Movements," in Herbert Kitschelt and Wolfgang Streeck(eds.), *Germany: Beyond the Stable State*(London: Frank Cass Publishers, 2004), pp. 153-176.

## 70 | 국제평화 창간호(2004. 12)

윤리적 기초에서 전쟁과 폭력을 반대해 왔다. 넷째는 여성의 평화운동 을 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운동은 신사회 운동의 시각에서 여성의 관료주의적 가치에 대항하는 또 하나의 대항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나아가서 평화운동은 공공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집단의 행위로 이해되었다. 예를 들어, 평화운동의 주요 의제의 하나인 반핵운동이 어떤 결과를 낳건간에 평화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사회정치 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운동은 반체제운동은 아니었으며, 기존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문화적 가치를 변혁시키려는 정치운동이었다.

네덜란드의 평화운동은 15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주도되었다. 대개의 운동은 1960년대 후반 유럽에 팽배했던 반체제운동의 외중에서 태어났다. 주요한 사실은 네덜란드의 평화운동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은 교회 평화협의회인 IKV(범교파연합)이다.<sup>31)</sup> 이 조직은 카톨릭 교회를 포함하여 대규모 교회들이 연합하여 1966년에 결성된 단체이다.

네덜란드의 평화운동은 1979년 미소 냉전의 대립시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외무 및 국방장관회의에서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및 네덜란드에 퍼싱 II 108 기와 크루즈 미사일 464 대를 1983년부터 퇴거한다는 사실에서 결정적인 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는 평화협의회로 하여금 반핵문제에 운동의 초점을 맞추는 계기가

30) 기독교전통은 IKV를 통해 강화되고 조직화되었다. IKV는 1966년 7개 교단(카톨릭, 칼뱅교, 네덜란드 개교회와 그리고 군소교단의 참여로)로 구성되었다. 원래 IKV의 탄생은 1966년 네덜란드의 주요 프로테스탄 교회인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핵무기의 사용을 거부한다는 성명에서 출발하였다.

안보 정책 등에 반대했고,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둘째는, 환경운동과 대안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여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70년대 지역단위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출발했으나, 전국적인 저항운동들이 조직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갔다. 그 결과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출현하게 되고 1983년 총선에서 5.6%를 획득해 독일 의회에 진출하기 까지 했다. 셋째로 독일공산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현실 정치에서는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나, 특정 부분에 있어서 특히 노동조합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Autonomie라는 무정부주의적 급진 집단들이 있으며, 이들은 이론 보다 행동과 실천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들을 중심으로한 평화운동에의 참여 역시 현저한 편이나, 이들이 노동조합이나 정당과의 연계는 아직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sup>32)</sup>

### (3) 네덜란드: 신정치운동으로서 평화운동

네덜란드 평화운동은 1960년대 유럽에서 새롭게 태동한 신사회운동 의 하나로서 평화운동이 나타났다. 그것은 환경운동, 평화운동 및 반핵 운동과 같은 커다란 신정치 운동의 한 부류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서구민주주의가 경험한 놀라운 경제성장과 번영의 결과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가진 세대의 등장을 의미한다.

네덜란드는 평화운동에 있어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다. 첫째, 무정부주의적 정신에 입각한 반군사적 평화운동이 있다. 둘째, 사회주의적 평화운동으로 비무장운동이다. 셋째, 기독교 평화운동으로 도덕적 및

30) 차명제, 앞의 글, pp. 226-227.

된 것이다.

1980년대초에 50만명 이상을 동원할 정도로 강력했던 네덜란드의 평화운동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데 실패하였다. 이것은 독일의 평화 운동이 독일의 녹색당이라는 정당구성과는 대조되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네덜란드 특유의 사회균열구조의 정치적 타협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sup>33)</sup> 독일의 평화운동이 녹색당을 통해 정치권으로 진입한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평화운동이 대변하는 사회균열의 요구를 체제내로 수용하고 순화시켰다.<sup>33)</sup>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비례대표제와 다당제의 정치체제였기 때문에, 정치세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배경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기성정당은 이들 세력의 정당화에 반대하였다. 대신에 기성정당이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계급갈등은 심각하지 않았고, 네덜란드의 복지국가의 제도와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정치의 요구는 체제내로 순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sup>34)</sup>

### (4) 이태리

이태리의 평화운동의 주요 세 행위자의 이니셔티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과 노동조합과 같은 정치적 행위자, 카톨릭교

32) 네덜란드는 독일보다는 스웨덴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프랑스나 영국에서처럼 계급갈등이 네덜란드의 가장 중대한 갈등은 아니다. 시민당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급진적이지 않다. 이미 사회적 갈등은 복지국가의 제도화를 통해 조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회균열적 문제의 해결에 하나의 근간이 되고 있다. 33) 강명세, 앞의 글, pp. 104-107.

34) 이런 면에서 네덜란드는 스웨덴의 사회균열 수용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미 네덜란드의 신정치균열과 기성의 정치균열은 서로 독립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상호작용의 과정을 밟아 온 것으로 본다.



리교국가이다.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익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 않다. 핵무기에 관한 이슈에 있어서 많은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 쟁점에 관한 시위를 지원했다. 몇몇 노동지도자들은 핵 생산과 판매에 반대하였다. 카톨릭 교회는 군사적 목적의 예산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세금 거부 운동 그리고 양심적인 강제징집에 대해 평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정당은 핵무기 설치 반대 운동을 지원하였고, 무기 거래를 통제하는 임무를 지지하는 형태로 평화운동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sup>35)</sup>

이태리의 평화운동은 1979년 NATO가 크루즈 및 퍼싱 미사일을 유럽의 공기에 설치하려는 결정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이태리의 시실리 연안 지방인 코시모(Cosimo)에 크루즈 미사일의 기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촉발되었다.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비무장 운동에 대해서 특별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첫째, 이태리인들의 경험에서는 역사적으로 군사적 전통의 기억이 없었다. 군사주의는 이태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낯선 산물인 것이다. 둘째로 이태리는 로마카톨릭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코스모플리탄적이었다. 1949년 이태리 의회가 NATO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좌파, 사회당 그리고 공산당은 연합하여 반대운동을 펼쳤다. 의회는 이태리의 어떠한 영토도 군사기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 이후 1949년 구소련이 첫 번째 핵폭탄을 터뜨린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소위 “공포의 테러”(balance of terror)가 현실적으로

35) Carlo Ruzza, "Institutional actors and the Italian peace movement: Specializing and branching out," *Theory and Society*, 26(1997), pp. 87-88.

#### 74 | 국제평화 창간호(2004, 12)

을 정치적 신조에 뿌리를 두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시키고, 정치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는 태도들이 나타났다. 1986년 이후 카톨릭 평화 운동의 양상은 보수적인 교황 및 보수적인 카톨릭 단체 - 예를 들면 Comunione e Liberazione - 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측면에서 반전(反戰)적인 성향을 고수해 왔다.<sup>36)</sup>

#### (5) 한국

한국인의 마음에는 평화의 문제는 본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것은 다분히 한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빈번히 이들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경험이었다. 19세기에는 서구 국가에 의해서 한국은 개화 내지 개방의 압력에 놓이기도 하였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통일된 독립국을 가를 이룩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종전(終戰)의 상황에서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자마자, 미소 강대국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북분단 이후 한국은 세계적 냉전 구도의 상징이 되면서, 급기야는 한국전으로 비화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통일이라는 의제가 국가의 주요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을 막고 통일은 남북관계에서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의 평화운동은 한국전의 종전의 시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평화운동과 같은 유형의

다 같은 것이다. 사회당이 집권 이후 이태리의 경우 군사적 관여까지도 NATO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이태리 공산당(PCI)까지도 NATO를 “사회주의를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방호막”이라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sup>36)</sup>

1983년 NATO 미사일 배치와 함께, 이태리의 다른 사회운동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 혹은 학생 운동에 비해서 평화운동의 동원은 급속히 저하되었다. 그러나 다른 이태리 사회운동과는 달리, 평화운동은 다른 영역, 특히 종교 영역에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평화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이태리 공산당의 평화운동의 열기는 미사일 배치 반대 투쟁이 실패한 이후에는 다른 쟁점에 더욱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리공산당과 평화운동 사이에 정규적으로 공감대와 교감이 이루어져 왔다.

카톨릭 교회는 여타 국가의 카톨릭국가에 비해서 덜 진보적 성향을 띠었다. 이태리처럼 카톨릭교회가 독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회와 국가의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이익 보호에 전념하고 있었다.<sup>37)</sup> 그럼에도 크루즈 미사일 반대 운동 이후에 교회의 공식적인 위치는 점차적으로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상당한 교구에서는 정치적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카톨릭 조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 카톨릭교리들은 정치로부터 후퇴하거나 혹은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양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교적 신념

36) Ernesto Balducci, "Peace Movement in Italy," in Choue, Young Seek(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2nd ed. vol. 4(1999), p. 223.

37) Ruzza, *op. cit.*, p. 95.

#### 75 |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평화운동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평화운동의 단체는 다른 시민 단체의 운동에 비해 규모가 적었다. 그럼에도 몇 가지 평화운동은 군부 독재 체제의 민주화 시민운동, 환경운동, 산업평화운동 등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한국의 평화운동은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평화운동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웠다.

우선 순수 민간 단체로서는 1994년 6월에 만들어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있다. 종교단체의 평화조직으로는 1993년 각 종교단체의 평화통일운동 조직들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 산하의 조직에는 YMCA 산하 “서울 YMCA 평화교육 실천 교사회”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산하의 “경실련 통일 협의회” 등이 있다. 그러나 “서울 YMCA 평화교육 실천 교사회”와 “평통사”를 제외하고는 평화보다는 통일이 우선적인 실천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sup>39)</sup>

한국의 평화운동은 남북한 대립의 상황에서 평화논리보다는 안보는 리가 더 강했다. 군부독재정권하에서 독재정권의 유지 수단으로 빈번히 북한에 의한 전쟁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용되어 왔다. 그리고 반전론자들은 친북주의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냉전반공논리는 평화논리를 늘 앞서는 것이었다. 평화논리는 그 당시의 정권유지자들에게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가혹한 탄압을 받아왔다.<sup>40)</sup>

한국의 평화운동은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진전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국내의 평화운동

39) 차명재,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유럽과 한국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94년 정기사회학 대회』(1994), p. 202.

40) 위의 글, p. 203.



이 새로운 형태는 월드컴 열기가 식기전인 2002년 12월 시청앞에서 미  
 국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두 여중생에 대한 애도와 불공평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촛불시위'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거의 일년  
 가량 계속된 결과, 규모면에서 연인원이 500만명 이상 참여하였다.  
 1 주기 추모행사의 규모는 15만명에 이르렀고 시청앞 광장 등 국내의  
 89개 지역에서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여중생범위대"의 발표가 있었  
 다. 그것은 반전운동이면서 동시에 반미운동의 성격으로 나아가기 시  
 작하였다.<sup>41)</sup> 그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을 주적에  
 서 삭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사건과 맞물리면서 국내의 보수진  
 영과 진보진영의 극렬한 대립의 양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양측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평  
 화라는 목표 추구에는 일치점을 보이며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격렬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이라크파  
 병 문제와 미국의 부시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이라크 내의  
 한국인 피살 사건과 맞물리지면서, 국내의 평화운동 역시 과거 월남전  
 당시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반전 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이 재현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는 것이다.

41) [http://www.donga.com/tbin/ourpuif=c1s&code=c1\\_&n=200361201...](http://www.donga.com/tbin/ourpuif=c1s&code=c1_&n=200361201...) (검색  
 일 2004. 11. 17). 이 행사에 관해 강금실 법무장관은 전화를 걸어, "미국 국기를 휘  
 손하지 말고 추모집회가 시위로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측에서도 미 대사관 앞까지 진행을 강행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  
 다. 당시 고건총리 역시 촛불시위가 한, 미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와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78 | 국제평화 창간호(2004. 12)

그러나 미국의 평화운동은 대부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  
 태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없었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중심부에는 미국의 존재가  
 항상 자리잡고 있었다. 더욱이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정치적 군  
 작적 행동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자체가 평화담론의 중심부  
 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으로 인한' 평화담론은 뉴테러리즘 혹  
 은 문명충돌론이라는 학문적 담론과 얽히면서 평화운동에 새로운 함의  
 를 던져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44)</sup>

전세계적인 반전운동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  
 라크 침공을 감행했다. 당시의 반전운동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 반전운  
 동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1960년대 베트남 반대 운동 이후 최대규모였  
 다. 세계적으로도 역사상 최대규모를 엮었다. 전쟁 시작 전부터 대규모  
 반전운동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반전운동이  
 일어난 것도 유례없는 일이었다. 지식인들 중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국  
 제테러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선도적인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sup>45)</sup>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평화 및 정의를 위한 캠퍼스 운동'  
 (The Campus Movement for Peace and Justice)의 지도자인 오스트  
 와일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나쁘다(harmful)는 사실이 반 라덴과 알 카

Virginia S. Williams, "Grassroots Movements and Witnesses For Peace:  
 Challenging U.S. Policies in Latin America in the Post-Cold War Era," *Peace  
 and Change*, 29: 3&4(2004), pp. 419-420.

44) 부시 재선과 관련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출구 조사 결과, 투표자들에게 테러리즘  
 19%, 이라크 전쟁 15% 등 전쟁과 관련된 담론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http://news.bbc.co.uk/2/hi/americas/3973197.stm>(검색일 2004. 11. 4) 참조.

45) 대표적으로 슘스키 같은 이를 들 수 있다. 노암 슘스키, 박행웅, 이종삼 역, 『슘스키  
 9·11』(서울: 김영사, 2001) 참조.

IV. 평화운동의 시대적 과제:

미국의 평화운동 및 '미국에 의한' 평화담론의 함의

평화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초기의 국부들에게도 주요 관심사의 하  
 나였다.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헌법의 초안자들에게도 평화의 문  
 제를 다루는 정부 부서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적이 있었다. 그  
 리고 오랜 시일이 지난 후인 레이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86  
 년 4월 14일에 비로소 미국평화연구소(USIP,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가 설립되었다. 그 활동의 영역은 주로 초기에는 펠로십, 보  
 조금(grant) 지급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1년에는 개인과 연구소에  
 20만불의 기금을 지원하였고, 설립 당시의 여러 어려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1986년부터 2001년까지 6,284 건의 보조금 및 펠  
 로십의 지원금이 약 3억 8천만불에 달하고 있다.<sup>42)</sup>

1970년부터 1980년에 이르기까지 인권운동 및 NGO와 같은 단체들  
 이 미국 및 남미 지역에 급속히 늘어났다. 그것의 대부분은 미국이 지  
 실행하는 중미의 내전 및 압제적인 군사 독재로부터 비롯되는 폭력의 문  
 제 때문이었다. 지미 카터 정부는 인권을 강조하여, 평화운동집단들이  
 미 연방정부의 협력자임을 강조하면서 교회들이 남미의 빈곤층을 지원  
 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1983년부터 1990년간 미국내의 NGO  
 그룹은 두배로 늘었고,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남미의 경우는 그  
 숫자가 거의 3 배에 달하게 되었다.<sup>43)</sup>

42) Mary E. Montgomery, "Working for Peace While Preparing for War: The  
 Creation of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40:4, pp. 479, 494.

5. 평화운동의 현황과 과제 | 79

에다 및 탈리반이 옳다(just)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담론은  
 부시와 빈 라덴에 관한 담론이 동일한 패턴으로 이분법에 빠져드는 경  
 향이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sup>46)</sup>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였고, 미국의 세기였다. 20세기 전반 두 차례  
 의 세계대전은 서유럽 국가들의 쇠퇴를 가져오는 대신에 20 세기 후반  
 의 냉전은 소련의 해체로 막을 내렸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이데올로  
 기 전쟁의 승리, 즉 3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어떠한 강대국도 21세기 초반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1 년  
 9월 11일의 테러는 21세기 평화의 전망에 예상외의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이것은 급기야 부시 행정부의 "21세기의 첫 번째 전쟁"의  
 선포로 이어졌다.<sup>47)</sup> 그것은 뉴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  
<sup>48)</sup>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 선포였다. 부시 행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냉전시기와 구분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전혀 새로운 안보위협  
 도태에 대한 전쟁선포이다. 어떤 이유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응은 영  
 국을 제외한 전통적 동맹국들의 비판과 전 세계적 차원의 반미주의  
 에 직면하게 되었다.

후쿠야마가 1980년 후반의 '역사의 종언'에 대하여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은 헌팅턴의 시각을 입증해

46) Michal Osterweil and Rashm Varma, "The Campus Movement for Peace and  
 Justice: One US response to September 11th," *Development* 45:2, p. 107.

47) 이해정, "미국의 테러전쟁: 21 세기의 주권과 평화," 제1회 비판정치학 대회  
 (2003), p. 1.

48) Lawrence Freedman, "A New Type of War," in Ken Booth and Tim Dunne,  
*Worlds in Collision: Terror and the Future of Global Order*(London:  
 Palgrave, 2002), pp. 37-47.



주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물론 후쿠야마 자신도, 9·11 사태 이후 “역사의 종언”의 견해가 “문명의 충돌”의 견해에 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sup>49)</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의 적실성과 상관없이, 이 담론 자체가 던져주는 이데올로기성의 문제는 앞으로 평화운동의 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의 종언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수용하는 분위기로 연결되었으나, 문명의 담론이 교묘하게 종교적 대립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곧 그것은 테러리즘이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질 때 미래의 평화운동 역시 좁혀질 수 없는 ‘이데올로기적’ 내지 ‘종교적’ 균열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입장 내지는 문명적인 시각에서 출발할 경우 미래의 평화운동은 결코 어떤 접촉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여 행선을 긋는 제로-섬의 관계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뉴테러리즘 대 ‘반테러리즘’의 전쟁이 이제 단순히 ‘반사적 민족주의’(reflexive nationalism) 대 ‘사려깊은 애국심’(reflective patriotism) 이상의 구도로 비화 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의 위험성은 공공연한 것이든 묵시적이든 종교적 대결이기에 타협점을 찾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sup>50)</sup>

즉 중동국가에 의한 테러리즘이 반미주의를 떠나서 ‘지하드’라는 정의의 전쟁으로 다시 부활되어, 무차별적인 자살폭탄 테러로 나타날 때

49) 프란시스 후쿠야마,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세계경제연구원(특별강연) 2003년 2월; 강정인, "문명충돌론: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대안인가," 『시상』 (2003 봄호) 참조.

50) 반사적 민족주의 및 '사려깊은 애국주의'에 대해서는 Robert Jensen, 'Patriotism's a Bad Idea at a Dangerous Time,' *Peace Review* 15:4(2003), pp. 389-390 참조.

이런 상황은 평화운동을 오히려 종교적 담론으로 이끌어 갈 소지를 높이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종교 테러는 역사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냉전 이후 새로운 밀레니움의 시기에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함의를 던져주는 것이다.<sup>51)</sup> 9·11 테러는 완료형이 아니라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의 반테러 전쟁은 “전세계적, 전방위적 반테러작전”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제가 국가간의 전쟁처럼 승리와 패배가 분명한 경우라면, 그 시점이 일단 평화 구축의 시점이 될 수 있는 반면, 테러는 현재진행형이면서 무한정한 미래진행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운동을 주도 이들을 더욱 고민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호소 이전에 무국적 행위자에 대한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평화운동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공허한 외침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그들의 반응이 종교적인 언어로 대응하게 될 때 타협의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평화운동에서의 우선 순위는 전쟁의 종교적 담론화에 맞설 수 있는 ‘담론 구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재 진지구적 현안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평화운동이 염두에 둘 우선 과제라 하겠다.

## V.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평화의 개념은 그 사상적인 기원을 종교적 것에서 비롯

51) 장병욱,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한국종교학의 논총』, 제 23-1호(2002), pp. 8-9.

되고 볼 수 있다. 평화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전쟁과 관련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았고, 전쟁 부재의 삶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전쟁 혹은 전쟁과 관련된 개념들이 새롭게 개념화되고 정의를 되면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목표와 성격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전통적 ‘안보’의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안보’라는 개념으로 그 강조점이 옮겨지는 것과 유사한 것임을 우리는 단순히 전쟁 부재에 대한 이해로 시작된 평화의 개념은 확대되어 종전에 전혀 평화와 무관했던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할 수 있게 이르렀다. 이제 평화의 개념은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쟁점을 다 수용해야 할 만큼 다양해졌다. 어떤 의미에서 평화 개념은 온갖 쟁점의 개념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문적으로 평화 개념은 ‘평화연구’(peace research)를 통해서 개념이 진화되었고,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 갔다. 나아가서 그 개념의 기초로 평화운동을 통해 현실적인 평화의 실천 및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 왔다. 그러나 평화 개념이 넓은 의미로 해석되면서 평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평화운동은 그 운동의 목적의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평화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가 후속적인 평화 운동 및 평화교육의 성격과 방향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화운동의 커리큘럼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다.

평화운동의 기원은 기독교적 배경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소위 국제평화운동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전쟁의 수단이 아닌, 또 소수의 강대국의 결정과 간섭없이 유럽 국가간에 협약, 중재를 통해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

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는 운동적 차원 이외에도 평화 및 평화적 갈등 해결에 대한 연구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실 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양쪽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부단히 확대되어 왔다.

평화운동이 반전과 관련된 것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 갈등적 태세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평화운동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요인은 무엇보다 전쟁이라는 변수이다. 전쟁의 ‘경험’은 종전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던 평화운동의 성격 자체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거기에 소위 ‘문명충돌’이라든가 ‘이슬람 근본주의’라든가 다분히 단시일내에 화해될 수 없는 담론-특히 종교적 신념 - 이 개입하게 될 때, 평화운동의 논의와 방향자체가 종교적 담론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해될 수 없는 종교적 담론은 그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이든 지하드(성전)이든, 그 담론의 빈번한 언급 자체가 평화운동의 방향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다. 뉴테러리즘의 성격이 그 피해를 주는 방식은 더욱 커진데 비하여, 그리고 미국이나 서방세계에 의해 파장되어 나타나는 아니든간에 -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평화운동의 우선 순위는 전쟁의 종교적 담론화에 맞설 수 있는 ‘담론 구성’이 우선과제라 하겠다. 평화운동은 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될 수 없는 담론을 화해할 수 있는 담론으로 흡수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 이전의 평화운동은 운동이 중요시되었으나 이제는 ‘문명충돌론’의 우세를 잠재울 ‘대안 담론’(counter-discourse)이 더욱 필요 한 시대가 되었다.\*



## | Abstract |

**Peace Movement and Its Implication: Assessments and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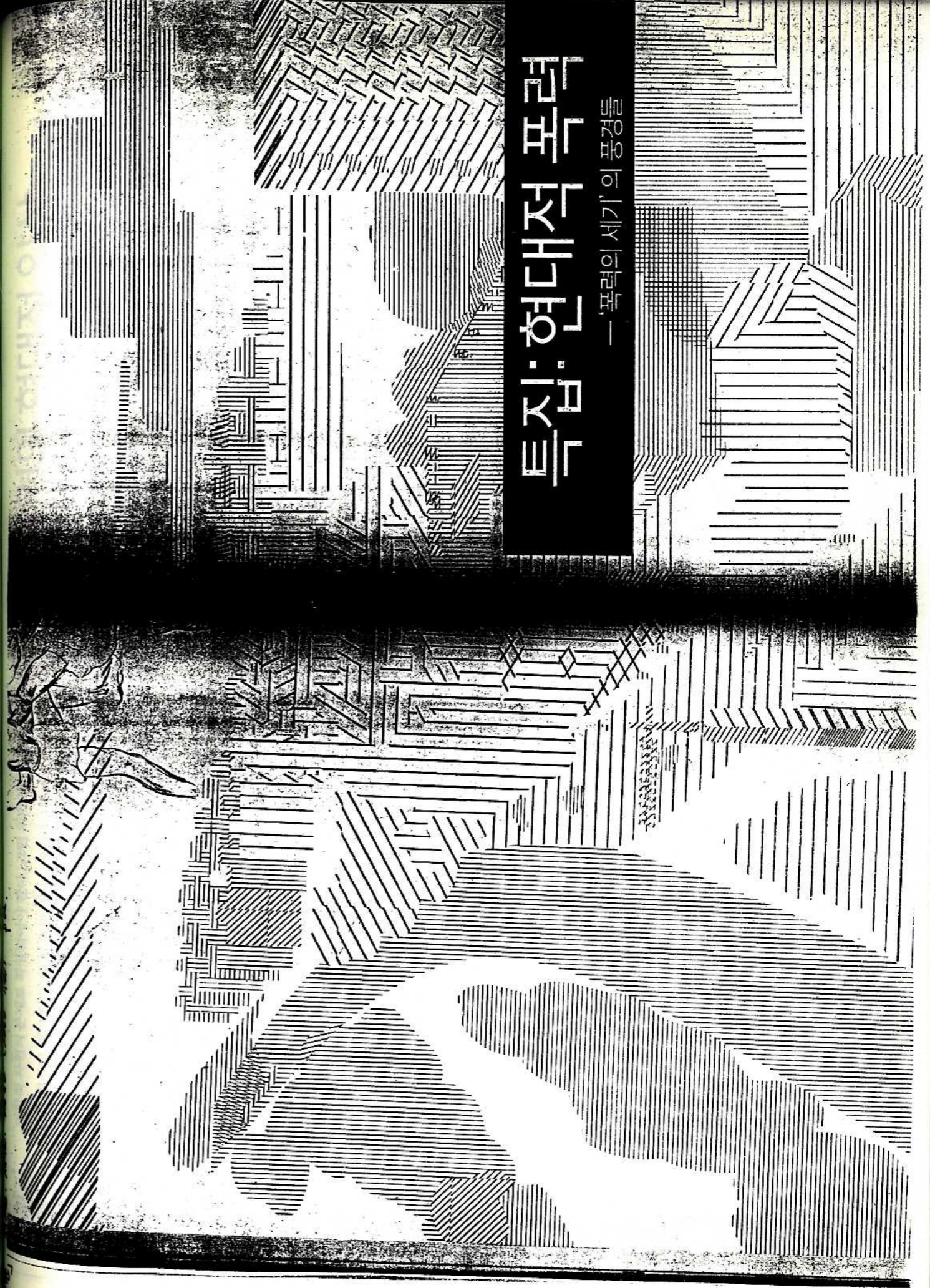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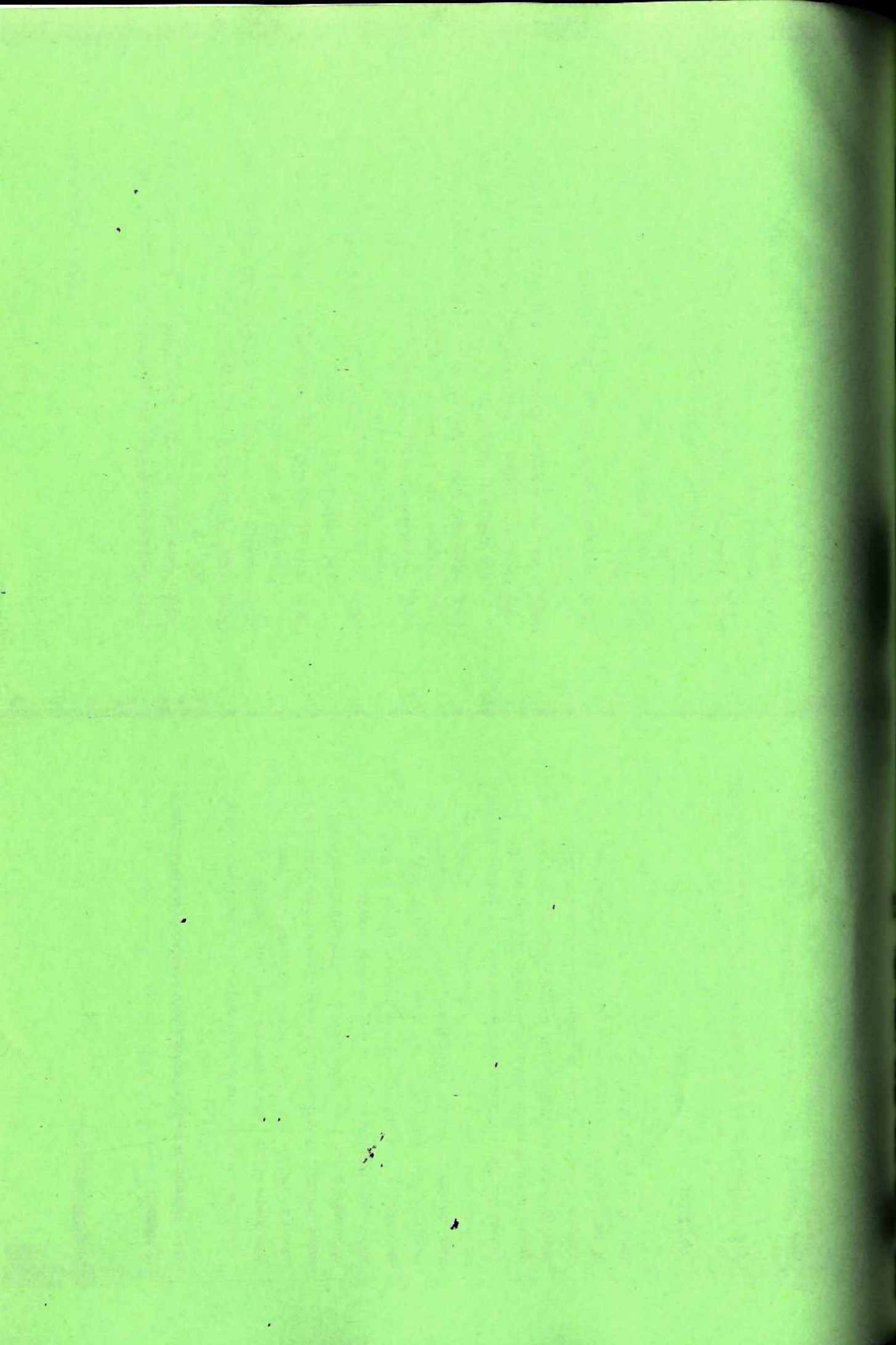
Until most recently, the subjects of peace studies have come to encompass diverse issues deriving from social conflicts, let alone concern about the very 'wars'. In this sense, the term 'peace' is a vague concept. In retrospect, drawing upon western experiences concerning peace movements, they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eeking and building peace. By contrast, new terrorism and the US-led responses to a new type of war have influenced the future trajectory of peace movements to a greater extent than any other issues. Such events require a reinterpretation of the relevance for conventional peace movements. The seemingly 'war of discourse' such as "the Clash of Civilization" seems to negatively have affected overall tenets of peace movements. Under the circumstances, we need to consider undertaking peace movements with a focus on 'counter-discourse' so that they may evade an irreconcilable 'war of discourse' among social movements underpinning religion-con-noted strifes and the likes.

**<참고문헌>**

- 강명세, "네델란드의 신정치 운동: 평화운동," 『경제와 사회』, 30호(1996) 여름호.  
 김미현, "Bismarck 시대 독일의 평화운동과 제국창건이 유럽에 미친 영향," 『부산사학』, vol. 23(1992).  
 이희영, 양재경, 정숙영,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방향』(서울: 여권개발원, 2000).

- 강정인, "문명충돌론: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대안인가?," 『사상』(봄호, 2003).  
 고세훈, "영국의 평화운동: CND의 부침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8호(겨울호, 1995).  
 김승재, 이학근, 『평화와 평화상』(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김열수,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균열," 『국가전략』, 제3권 3호(2002).  
 박종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평화사상과 평화운동," 최상용 편, 『현대평화사상의 이해』(서울: 한길사, 1992).  
 안병진, "9·11 테러와 미국의 외교노선: 연속성과 단절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2003).  
 2진곤, "전쟁과 과학자의 평화운동," 『과학사상』, 15호(1995년 11월).  
 이신화, "탈북자와 인간안보," 『사상』(2001 여름호).  
 이정옥,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간안보: 한국 기준 차준 여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20권 1호(2004).  
 이현경, "국제사회의 테러유형·동향과 국제안보환경," 『평화연구』, 11:3(2003).  
 이해정, "미국의 대테러전쟁: 21 세기의 주권과 평화," 제1회 비판정치학 대화(2003).  
 임성호, "도그마와 컨센서스 사이: 테러시대의 미국민주주의," 『사상』(2002년 봄호).  
 상병욱,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 23-1호(2002).  
 정 응,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제 44권 2호(2004).  
 차명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성화 가능성,"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4호(1994).  
 차명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유럽과 한국의 비교," 『한국사회학회 94년 전기사회학 대회』(1994).  
 채재병, "국제테러리즘과 군사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제44집 2호(2004).  
 최현미, "리처드 코덴(Richard Cobden)과 19세기 국제평화운동과의 관계," 『대구사학』, vol. 72(2003).





# 특집: 현대적 폭력

— 폭력의 세기의 풍경들



또한 '통증 없는 폭력'으로서의 '이미지의 폭력'과 '언어폭력'으로부터 비가시적 형태의 '문화적 폭력'과 '상징폭력'에 이르기까지 추상적-비물리적 차원의 범주들을 포괄하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갖는다. 그리하여 '폭력의 지구화' 내지 '지구화'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염두에 두자면, 21세기의 인류는 과연 '폭력의 세기'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폭력'이라는 메커니즘의 모든 개별 주체들은 권력의 표면적인 장소, 그것도 다만 하나의 가정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폭력의 고고학』의 저자는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실제의 장소는 도대체 어디인가? 이 저자에 의하면, 그것은 '사회적 몸체' 그 자체다. 이 사회적 몸체는 권력을 소유하고 또 분할되지 않은 통일체로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사회적 존재를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한 개별 주체의 '개별성(individuality)' 이야말로 모든 권력과 폭력이 작동되는 최종 귀착지라고 말해야 하리라. 왜냐하면, 먼저 개별 주체들의 자기동일성으로서의 개별성이야말로 '분할되지 않은(individual) 상태'의 최종심급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론』에서 언급한 '분쟁과 혁명'의 욕망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절은 자기동일성의 확보와 유지라는 저 생물-사회학적 관점의 정치철학적 변역으로 읽히는 데 별 무리는 없을 듯하다. 여기에서 이 '혁명'은, 물론, '폭력'으로 비견될 수 있겠다. '혁명적 감정의 가장 보편적이고 주된 원인은 평등의 소원이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과 자신이 평등하다고 생각할 때 품게 되는 소원이 그것이다. 아니면 불평등과 우위의 욕망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는데도 더 많이 갖기는 커녕 자기만 못한 자들과 똑같게 또는 그들만도 못하게 가졌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욕망이 그것이다."

역업과 폭력에 대한 성찰과 담론은 단지 정치적, 윤리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존재론적, 인류학적, 문화사적,

미학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집의 화두로 제기하고 있는 폭력이라는 주제는 광대하고도 고색창연한 테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 '폭력과 파괴의 역망'으로서의 폭력이라는 담론의 대상에 대한 고고학적 탐사의 방향을 취하지 않고, 그것의 미시적 국면들에 관심의 초점을 두어 고원학적 관점에 서 그 현재적 양상과 지행도를 그려내고, 또 가능하다면 이를 토대로 미래적 유토피아로서의 억압 없는 사회'와 '폭력 없는 세계'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방향을 취한다. 어떻게 한 개별 주체는, 또는 한 사회와 국가는 폭력적 요소의 기반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묻는 이 지난한 작업은, 물론, 문학의 존재 근거에 대한 탐색을 동반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문학이 꿈꾸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겠는가 말이 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폭력에 대한 담론은 "문학의 자기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금석"이라는, 이 특집 주제의 필자로 참여한 한 문학비평기의 견해는 정당한 것이다. 문학의 존재 근거가 바로 억압과 폭력이 없는 세계에 대한 꿈꾸기에 있다는 인식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장 분명한 문학관임은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평소 다섯 폭지로 구성되던 이 특집 난의 기획이, 이번 호에 특별히 부가된 또 다른 소기획의 원고들로 인해 『문학·판』의 예정된 전체 분량을 과다하게 초과할 사태가 예견됨으로써, 불가피하게 한 쪽지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기획에 자리를 얻지 못한 나머지 한 쪽지는 아마도 '현대적 폭력'이라는 담론이 오롯이 돌출하게 된, 과학 기술의 발전과 진보에 대한 믿음에 토대를 둔, 근대성이라는 맥락과의 이론적 관련을 검토하는 자리로 돌려져야 했을 터이다. 이십지만 이러한 측면에서의 이론적 성찰은 따로 참조하시기를 독자들에게 당부드리며, 아울러 이 특집의 담론들이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만연한 폭력의 '보편성'과 '일상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 폭력의 현대적 양상

이득제

모든 권력의 감소가 폭력의 공개적인 초대  
—한나 아렌트, 『폭력에 관하여』

한나 아렌트는 『폭력에 관하여』(1970)에서 폭력의 현대적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폭력은 권력에서 도출될 수 없다는 명제를 생산해냈다. 기존의 정치철학에서 폭력은 권력의 가장 극악한 발현이라고 인정되던 명제를 비판하는 아렌트는 권력과 폭력이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립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렌트가 권력과 폭력이 대립적이라고 말한 뜻은

하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서 다른 것은 부재한다. 폭력은 권력이 유포된 곳에서 나타나지만 제멋대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권력의 소멸로 끝난다. 이것은 폭력의 대립물을 비폭력으로 사고하는 것이 올바르게 읽히는 것을 함의한다. 그래서 비폭력적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어반복이다. 폭력은 권력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은 권력을 전혀 생산할 수 없다!

1.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김정한 옮김, 이후, 1999, 90쪽. 『폭력에 관하여』가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의 세기』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렌트가 말하는 권력이란 무엇보다도 기형 예들을  
어 20세기 초 유럽의 제국주의 권력이나 스탈린주의 체제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권력이 위태로운 곳에서 폭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아렌트가 예들  
들어 말하듯이, 가형 체제 침공이 러시아 정부의 권력 추스르는데 이르렀  
다는 것이다. 이것이, 동어반복이긴 하지만, 아렌트가 순전히 폭력만을  
통한 지배는 권력이 상실되고 있는 곳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말하는  
뜻이다.

그런데 필자가 아렌트의 '권력' 개념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치사적인 맥락에서의 '권력' 개념이 아니다. 아렌트의 '권력' 개념은  
역능(Vermogen/Puissance) 개념과 비슷하거나, 이러한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권력' 개념은 '폭력에 관하여' 이전에 아렌트가 쓴 '인간의 조건'에  
바탕하고 있다. '인간의 조건'에 나타나는 아렌트의 '탄생성(quality)'의  
개념은 '폭력에 관하여'에 다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사람을 정치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행동 능력이다. ... 실현적으로 말해서  
행동한다는 것은 탄생성이라는 조건에 대한 '인간의 답변'이다. 우리 모두는 생  
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신을 내거나 초심자처럼 개념을 만들지  
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탄생이라는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이었을지  
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모든 행동은 단순한 행위가 되거나 담습이 되거나  
했을 것이다. ... 폭력이나 권력은 자연적인 현상, 즉 생명 과정의 발전이 아니  
다. 그것들은 인간사의 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동 능력,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보증되는 인간의 특성이다.

2. 앞의 책, 86-87쪽.  
3.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 개의 고원」에서 권력(pouvoir)과 역능(puissance)을 구분하는데 전자는 아렌트가 말하는 폭력에 후자는 아렌트가 말하는 권력에 가깝다.  
4. 앞의 책, 125-126쪽.

시각'이란 말은 '인간의 조건'에서 지구 강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  
인용문에 나타난 아렌트의 주장은 인용문 바로 앞에서 '행동할 권력이란  
의 함축한다'는 아렌트의 주장을 이어받아 하는 말이다. 어쨌든 아렌트에  
대하여 권력이란 정치체만이 아니라 바로 파레토의 말을 인용한다면  
행동할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권력의 기반은 '탄생성'에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가 말하는 대로 폭력이 권력을 파괴한다면 그 폭력  
은 행동할 권력의 기반이 되는 탄생성을 파괴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인간  
의 시작할 능력'이나 '행동할 능력'을 파괴한다는 뜻도 될 것이다.

아렌트는 현대 세계에 이르러 행동 능력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다고  
의하고 소렐, 파레토, 파농, 시르트르 등의 폭력 예찬론이 나오는 것도  
미르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권력과 폭력에 대한 아렌트의 주  
장의 '권력의 궁극적인 본성은 폭력이다'라고 말하는 라이트 밀즈의 주장  
에서 한결을 진전되어 있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폭력을 행동할 능  
력과 탄생성의 파괴라고 파악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시각점을 던져줄 수 있다. 아렌트가 '폭력'에 관하여 성찰할 때 그 대상이  
되었던 20세기가 21세기에 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필두로 반복될 조짐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에서 사회적 폭력으로 (1)

폭력이 권력과 정면충돌해서 권력을 대체하는 것이 20세기 현대사라면  
우리의 경우 폭력과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렌트가  
권력의 소멸이 폭력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이 말을 우리의 경우  
에 어떻게 적용시켜 말할 수 있을까? 아렌트는 이러한 현상을 테러에 기  
초하는 전체주의, 폭력에 의지하는 전체 정치, 권료주의, 중앙 집권화, 권

2. 아렌트는 전체 정치가 가장 폭력적이면서 가장 덜 강력한 통치형태를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폭력의 세  
기, 71 쪽), 폭력과 테러를 구별한다(같은 책, 88쪽). 전자에 의지하는 것이 전체 정치의 두계 정치이다.

력의 득점화, 중추적 민족주의, 인종주의 등에서 찾는 데 이러한 현상  
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폭력에 대한 이해, 폭력의 현대적인 전개양  
상을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들뢰즈와  
트가 동물학이나 동물심리학이 '폭력을 적절하게 설명해줄 수 없다고 비  
판했던 것처럼 아렌트의 폭력론을 우리의 역사에 그대로 대입시킬 필요  
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폭력을 권력의 대립물로 파악하고 폭력을 권  
력과 더불어 사유하는 아렌트의 독창적인 사고가 지시해주는 점은 많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아렌트가 폭력을 두고 사유할 때 '인간의 조건'  
것이지만, 폭력의 사회화 그리고 지구화라는 문제 설정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 한계로 지적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아렌트 식의 어법을 빌려 말한다면, 우리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권력이 폭력에 의해 소멸되고 권력을 폭력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7, 80  
년대를 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렌트가 독재 정치를, 폭력을 통해  
수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국가라  
는 고립된 상황에서 우리는 독재 정치의 호된 폭력 앞에 노출된 채 살아왔  
다. 7, 80년대를 지배한 폭력은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었고  
대한민국이 WTO를 통해 국제질서에 노출되기 이전, 국민국가는 틀 안  
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지금은 여러 영화에서 보듯이 폭압적이었던 7,  
80년대를 영상으로 회고하는 시대가 지나고,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보  
듯이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 특정 범죄자의 살인 행위에 동조하는 끔찍  
한 결과를 빚어냈다.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군사훈련 수업, 동화관제훈련,  
민방위훈련 등 국가권력이 주도하던 군사문화가 팽배하던 시절은 특정  
범죄자의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호조진이 되었다. 봉준호 감  
독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이 점을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  
았든 동화관제훈련에 따라 마을 전체를 순간적으로 암흑으로 만드는 비  
상시렌 소리는 아무도 범죄자의 얼굴을 목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범죄  
자의 범행이 반복될 수 있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의중이 바라



한다. 돌피즈와 가타리의 어법을 빌려 말하면, 우리나라의 780년대가 두 개의 군대에 의해 국가가 전체주의 단계로 올라간 군부 독재 시절이었다. 이 이 시절의 폭력은 "반드시 국가를 통해 작동하는 폭력"이다. 평화롭게 말하면 군대와 경찰 같은 억압적인 국가장치를 통해 작동하는 폭력이었던 것이다.

7, 80년대 국가 폭력에 의지하는 독재 정치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는데 테러에 기초한 전체주의적 지배가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는데는 정치철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를 파시즘으로 파악하는 것이 잘못된 통념인지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아렌트가 말하는 대로 나치즘이 단순히 국가나 폭력장치들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부단히 운동하는 운동들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계' 호, 전쟁에 지면 나라가 망함'이라는 히틀러 권력의 구호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80년대를 지배했던 죽음의 폭력이라는 문제는 파시즘의 실현된 허무주의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 의문사, 투신자살, 분신자살, 연세대 화생 이한열의 죽음 등 죽음의 폭력 앞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바다와 남침이라는 전쟁구호가 지배하던 시절이 80년대였다. 돌피즈와 가타리가 비탈리오의 '자살-국가(suicide-state)' 개념을 빌려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구별하며 말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을 보자.

측거기에서 이른바 전면전은 국가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를 전유하는 전쟁 기계의 사업으로 나타나며 국가 자체의 자살 이외에는 다른 어떤 구도 없는 절대 전쟁의 흐름이 국가를 가로질러가게 한다.<sup>7</sup>

7. 짐 돌피즈, '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88쪽, 물론 돌피즈와 가타리의 이 말은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폭력이라는 뜻이다. 특수한 폭력이 동반하는 곳 에 본원적 속력이 있듯이.

8. 앞의 책, 457쪽.

9. 앞의 책, 같은 곳.

80년대의 우리 사회가 비탈리오 식의 자살적 국가였는지는 더 곰곰이 생각해보는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노동적위대에 막대한 향토에 미군이 창설된 이후 예비군훈련이 아직도 시행되는 예를 본다면 절대적인 호를에 의한 국가 자체의 자살이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나치처럼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고 국민 전체의 죽음을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나치의 입에서 나온 '죽음 만세!' 라는 외침이 전쟁분위기를 조장하던 우리의 상황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최근 서해 연평도 교전 사건이나 미군부대 한강 이남 이전 문제, 병역대체입법 논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절대전쟁의 위험스러운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국가폭력에서 사회적 폭력으로 (2)

한국 사회에서 폭력의 문제는 87년 시민대항쟁 이후 국민국가 안에서만 문제되지 않고 국민국가의 틀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간다. 그리고 국가가 민주화되면서 국가장치에 의한 폭력은 사회적인 것의 영역으로 이전되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폭력이 지구화되는 모습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국가의 폭력에서 사회적 폭력으로 이행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폭력의 소멸과 더불어 권력의 감소가 아니라 중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아렌트가 말했듯이 폭력 자체가 무능력으로 귀착하거나,<sup>10</sup> 돌피즈와 가타리가 말하듯이 권력의 무력함이 권력을 위협에 빠뜨리듯이<sup>11</sup> 국가장치의 부속품에 불과했던 시민들의 의식이 국가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87 시민항쟁'을 통해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 한

10. 앞의 책, 439쪽.

11. '폭력의 세기', 88쪽.

12. '천 개의 고원', 435쪽.

국민의 의식을 진압했던 독재 정치가 종식을 고하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것도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다.

1993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는 이러한 특징들이 한 데 어우러진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절 기질 주목할 만한 것은 WTO 가입과 더불어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등장에 동반하여 폭력의 지구화 혹은 제국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장치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이 불특정 다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폭력으로 전이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그와 반대 급부로 사회의 폭력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 경찰국가식의 무자비한 폭력은 숨을 죽였고,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그리고 다시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 그 가시적인 성과는 축적되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IMF 관리체제하에 들어가면서 과거와 같은 정치적인 폭력의 형태가 사회경제적인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는 지속되었다. 무엇보다도 고용의 형태가 소위 '유연노동'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대다수를 '생존문화' 속으로 밀어 넣고 고용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명퇴, 인턴제,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쪽으로 고용형태가 급선회하고 있다. 삼성그룹에서 45세까지 이사가 되지 못하면 퇴직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45세에서 56세까지 고용이 불안하다 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사오정, 오륙도' 이야기는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한겨레 21」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레프팅 등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는, 극심한 노동강도 때문에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그 바람에 짧은 시간에 짊을 내서 여가를 즐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 나타난 '야식문화' 또한 강

화된 노동강도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90년대 초에는 12시 이후에 근무하는 사람이 적었지만 90년대 말로 갈수록 12시 이후 노동을 하는 인구가 늘고 있으며 새벽 두 시까지 일하는 사람의 숫자도 증가추세라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사회가 '25시간 노동체제'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이야기인 바, 이것도 사회경제적인 폭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영국은 '데리리즘을 통해 강한 구조조정을 겪었고 최근에도 교사 숫자를 감축하는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던 영국의 복지정책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영국 같은 사회는 복지국가를 경험한 이후 찾아오는 복지의 위기와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처럼 복지국가를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태에 서 국민국가의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가 국제질서에 노출됨으로써 복지의 위기가 아니라 지극히 미미했던 사회복지마저 붕괴할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와 같은 이중적인 의약분업은 일반시민들의 호주머니만 빈약하게 만드는 것일 뿐 아무런 복지혜택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의 부재'라는 명제가 고스란히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현상적으로만 관찰해도 우리 주변에서 불안성을 이루는 음모, 유혹문화는 우리 사회가, 아무도 나의 미래와 생존과 복지를 책임져 주지 않는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손쉬운 쪽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방향을 틀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길거리마다 빼죽빼죽 튀어나와 있는 간판들은, 비유컨대 살기 위해 자신을 알리려는 치열한 손짓처럼 여겨진다. 귀의 확장이 전회기이고 손의 연장이 전쟁 기계인 파피레이듯이 간판 또한 손의 연장이자 확장이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소위 말하는 문민정부 이후 한국 사회가 국가장치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이 잦아들고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진행되어온 사회 전반의 폭력은 21세기에 들어서서서 영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처럼 여겨진다. 2001년부터 영화 「친구」를 필두로 하여 지금까지 계속 녹차 우러머듯이 반복되는 소위 '조폭영화'는 이러한 우리 사







# 비폭력 · 평화를 위하여

고병헌

비둘기와 인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평화를 갈망하는 것일까? 평화를 원한다는 강도로 치자면, 분명 비둘기는 우리 인간보다 한 수 이른다. 비둘기는 기껏해야 월계수 가지를 입에 물고 날아다니는 정도이지만, 인간의 경우는, 먼 옛날 수많은 영웅호걸들에서부터 지금의 세계 정치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자신들이 하는 '치국(治國)'이야말로, '평천하(平天下)'를 위한 것이며, 자신들이 하는 것이라면 전쟁조차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인간이 하는 전쟁은 그것이 아무리 무자비한 것일지라도 모두가 평화를 위한 것이지 결코 평화를 깨려는 목적으로 수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인간이 만든 것이라 하면, 핵무기에조차도 '평화수호자(peace keeper)'라고 이름 지을 정도다. 그러니 평화를 염원하는 강도로 따지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단연 독보적이다. 하지만 평화라는 말의 '순도(純度)'에서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의 '평화'는 많은 정

것이 없다는 발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정의론(Theory of Justice)」으로 유명한 존 롤스(John Rawls, 2000)는 「원실주의적 자유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합리주의적'으로 알려준 자신의 저서 '만민법(The Law of Peoples)」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는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는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고 싶다.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및 최정수준의 만민들간에는 이러한 무기들에 효과적으로 금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 같다. 이들 만민은 상호간에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무법적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우리가 가정하는 것처럼—일부 제무기는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목적은 무법적 국가들을 꼼짝 못 하게 하고, 이러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자유적 또는 적정수준의 만민에게 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무법적 국가를 제압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핵무기의 보유와 그것의 '평화적'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의론으로 그 유명한 존 롤스의 논리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관에 기초해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혹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늘 전쟁을 한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법적 국가'가 전혀 겁먹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선제 공격을 해서라도 '무법적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없애버림으로써 '평화'를 지킬겠다는 논리가 국제정치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국내 정치상황에서도 매우 '진지하게' 대중적 설득력을 얻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길고 내전 명분이 일종의 '무법적 국가'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이었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파병을 통해 그들의 '무법적' 전쟁을 승인하였다. 북한도 핵시설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수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그리

## 1. 평화의 이념

인류 역사상 가장 전통적이면서 가장 보편적인 평화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팍스(pax)'적 평화관일 것이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와 같은 말은 말은 평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의 귀에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팍스'는 정치적으로는 전쟁을 막기 위하여 정치적 지배 체제를 공고하게 한다는 뜻이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적 평정을 의미한다. 라틴어 팍스에 해당하는 희랍어로는 '에이레네(eirene)'가 있는데, 이는 민족간 혹은 국가간(당시 고대 희랍 세계에서는 폴리스들 상호간의) 전쟁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평온한 시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처럼 '갈등, 전쟁, 혹은 (무장된) 폭력의 부재'를 뜻하는 평화를 흔히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라고 한다.

전쟁을 멈춘 상태, 혹은 전쟁과 전쟁 사이의 휴지기를 평화로 보는 '소극적 평화관'은 언뜻 보아 그 이론적 근거와 설득력이 약해 보이지만 실은 국제정치나 국제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평화관이며, 지금도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없으면 그것이 곧 평화'라는 평화이론은 평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아무런 분쟁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현상유지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이나 수단은 별로 문제될

고지금 당장이라도 수백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핵무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도 함께 문제가 되어야 당연하건만, 무법적 국가를 제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자는 '무법적' 위협에 한반도 전체가 전쟁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인데도 우리의 정부는 미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소극적 평화관과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또 다른 평화관은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International Education)'이 근거하고 있는 평화관이다.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은 전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국제체제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러한 이해는 국제적 이해를 낳을 것이며, 그러한 국제적 이해가 국가간의 관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연합(UN)과 그 관련 기구들 '인권' '다른 국가와 문화' 그리고 '환경'이라는 네 가지 기본 주제를 다루면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사상을 늘 서로 교환함으로써 세계 내의 민족간의 불신, 편견 등을 제거하고자 한다. 또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형, 습관, 관습, 경제발전, 생활수준 등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유, 성실성, 가족애, 미적 표현능력, 기타 다른 전형적 인간특질에 대한 갈망이 서로 같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소극적 평화관과 유네스코의 평화관에 대해 비판을 하려면, 평화를 또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적 평화연구'다. 비판적 평화연구는 유네스코의 평화교육이 첫째, 개인의 의식개조 차원만 강조함으로써 구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고, 둘째, 그럼으로써 자칫 현상유지를 위한 교육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비판적 평화연구는 평화를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그 이상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비(非)평화의 원인을 구조적 폭력과 불의에서 찾고 있다. 즉, 사회의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혹은 '잠복적 폭력(hidden violence)'을 제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positive peace)라고 부른다.

적극적 평화관은 평화의 성격을 구명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성취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폭력'의 문제까지 우리의 인식을 이끌었다. 데 그 의미가 있다. 비판적 평화연구는 폭력을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직접적 폭력)과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과 같은 구조적 폭력(간접적 폭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덧붙여졌다. 비판적 평화연구의 대표적인 이론가 중의 한 사람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를 정의함에 있어서 전쟁이 없으면 그것이 곧 평화라고 보는 전통적 이해와 사회정의의 실현으로서의 평화의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잘못된 사회구조와 체제의 재생산, 혹은 확대 재생산은 그 사회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질서와 체제의 정당성, 혹은 '불가피성'을 학문이론 등의 방식으로 입증·강화해줌으로써 유지되는 측면이 강한데, 이처럼 지식인들이 그들이 생산하는 이론과 담론으로 잘못된 사회구조와 체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가 바로 문화적 폭력이라는 것이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2000)는 지식인의 문화적 폭력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받은 계층이 선진도구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교조적 체제를 비판해야 할 세력이 억압받고 소외될 때, 지배계급의 신전은 거대한 성공을 거두기 마련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 원칙을 완벽하게 증명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까지, 폐쇄사회와 개방사회에서 식자층은 지배계급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운동의 전개과정을 보면, 1990년 이전에는 세계 분쟁의 양상이 주로 영토확장이나 자원 확보, 체제수호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과 갈등이었던 것이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 체제가 몰락한 이후에는 환경문제가 세계 평화의 핵심 초점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90년대 말부터는 보스니아, 코소보, 체첸,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와 이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프리카 곳곳에서 폭격하는 것처럼 다시 민족간의, 인종간의, 종교간의 갈등이 세계 불안의 핵심적인 이유로 등장하였고, 이에 덧붙여 안정적 경제성장과 기독교 유지를 위한 정치적·군사적 강대국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무법적'으로 팽창함으로써 '힘으로써의 평화'가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한다. 20세기 말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걸프전쟁, 그리고 21세기 초의 이라크 전쟁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 등이 모두 군사적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정리하면, 19세기 말부터의 세계 평화운동은 주로 국가나 민족, 인종, 종교를 단위로 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어왔다.

이처럼 한 세기 넘게 세계적 차원에서의 '열전(熱戰)의 폭력'을 경험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는 "힘이 곧 정"이라든가 "평화는 안보 없이 지킬 수 없다" "평화는 자신만이 지키고 가꿀 수 있는 꿈" 등의 논리를 수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폭력'은 어쩔 수 없이 없지 않는다는 논리가 개인의 행동이나 국가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정신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폭력의 내면화'(박노자, 2003)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열전(熱戰)-냉전(冷戰)-열전(熱戰)이 반복하는 세계 근현대사 과정에서 세계 평화운동이 주로 소극적 평화관에 기초하여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력의 내면화'가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것도 시대상황에서 비롯한 '한계적 문제'라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 주류

평화운동은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의 부당성을 밝히고 적지 않는 것에도 힘에 겨워서 '폭력의 내면화'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평화운동이 안고 있는 '한계적'은 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한계'가 원인이 되어 '오류적'은 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주류 평화운동이 원래 공격했던 것이 온갖 종류의 물리적 폭력을 근절하여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만, '폭력의 내면화'(한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이나 국가로 하여금 '강등 해결'의 수단으로 전쟁이나 테러 등의 물리적 폭력을 선택할 여지를 남겼고, 그 결과,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테러와 전쟁이 오히려 '훨씬 더 '폭력적'으로 상충하여왔다. 열전의 시대에서 '폭력의 내면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계'라면, 그러한 '폭력의 내면화'를 건드리지 않고 평화운동을 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런데 기존의 평화운동은 내면화된 폭력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폭력주의'적 정신봉토가 거꾸로 평화운동을 제한하고 포위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세계적 쟁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과 같은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 폭력 그 자체도 '한계'가 '오류'로 발전, 순환하는 상태인 것이다.

사실 인류의 긴장한 존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쟁 이외의 이유로 삶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파괴나 생태계 교란, 유전자 조작, 전자파 문제, 그리고 실업, 빈곤, 기근, 사막화, 온갖 종류의 차별과 인권침해, 신자유주의, 인간복제 등 참으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전쟁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강도로,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평화운동이 진정한 사회변혁운동 차원으로까지 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폭력주의'가

내면화한 사회봉토의 폭력이 내면화된 정신봉토를 바꾸는 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평화운동이 물리적 폭력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던 것이 전적으로 잘못이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은 접어두고라도, 물리적 폭력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변혁적 차원의 평화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평화운동이 '비폭력주의'의 '비폭력 평화사상'을 그 정신적 기반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생겨난다. 의하다하면 새로운 차원의 평화운동은 기존 평화운동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즉 '폭력주의'와 '폭력의 내면화'로부터 '해방'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우리 평화운동은 '특별히 실현하고자'를 지향하였거나,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에 기초해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소극적 평화관이 그것 아니냐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소극적 평화관은 말 그대로 평화를 해석하는 '관점'이지 '가치관'이나,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 '철학'적 차원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어 온 사회부문을 보면 환경파괴나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지역차별, 삶의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구조적 폭력과 관련된 주제나 신자유주의의 각 부문운동이 겨냥하는 세부 사회문제 영역들은 그 주제나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춘 운동단체(예를 들어 환경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 경찰련, 외국인 노동자 인권운동단체, 생협운동단체, 교육운동단체, 복지단체..... 등)의 몫으로 분류되고, 평화운동의 중심 주제로는 주로 '물리적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들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평화운동의 실천은 대체로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일종의 '테크놀로지' 수준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굳이 평화운동이 어떤 특정한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평화운동이 가치항적, 패러다임 변혁적 차원의 운동이지 않고서는 개인의 마음속에,



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폭력의 내면화'라는 정신공포가 평  
대한 사회에서의 평화운동은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폭력적 방식으로 해  
결되지 않고 할 때, 그 '수단'의 '부당성'을 드러내서 폭력이 실제로 발생하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계몽' 만으로는 폭력이 깊이 내면화된  
다. 근중의 선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일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요즘 놀라운 것은 대학생들 중에 파병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꽤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남들을 억울하게 희생시키는 게 잘못  
이라는 생각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갖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활 중에 국악이나 현실적인 실리를 들먹이는 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국  
제적 현실은 도덕과 윤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제법 그럴듯하게 어른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김중  
철, 2008)

그래서 평화운동은 그것이 저항하고 제어하려는 폭력이 어떤 종류의 것  
이든지,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폭력  
지향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폭력'이란, 어떤 사람의 목을 치는 행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속에 있는 것" (간디 해설, 2001)이기 때문에, "행위의 동기"를 '선(善)  
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말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일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사람의 행위의 동기를 선하게 변화시키  
는 것이 '정당한 폭력'이라는 수단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평화운동의 '한계와 오류' 모두를 극복하여, 물리적 폭력은 물론, 구  
초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도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사회변혁력'  
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하는지 모르겠다. 「바가바드기타」(간디 해설, 2001)  
의 가르침에 따르면, "비폭력은, 그것 앞에서 모든 폭력이 사라지고 말 정  
도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비폭력의 영향 아래서는 난폭한 들짐승도 계 본

그리고 국가의 정책 속에 내면화된 폭력을 제거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다. 또한 내면화된 폭력이 양산하는 개인적 폭력과 제도화된 폭력이  
'테크놀러지' 수준의, 혹은 '반대 투쟁' 수준의 평화운동으로만서는 어  
역시 처음부터 일부적인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절평  
한 '한계적 문제'가 '오류적 문제'로 진척·순환하는 성격, '회색의 순환'  
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부분운동이 평화운동의 것만이  
래 모일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 평화운동에 필요한 것은 '사회변혁운동'  
차원으로의 변혁'이다. 인간간의 관계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그리고  
고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가 지금까지처럼 폭력적이고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평화 충만한' 것이 되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 평화운동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3. 비폭력주의-대안적 평화운동의 철학적 기반

폭력을 내면화한 현대인은 폭력의 본질적 속성과 폭력이 우리의 사고와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상실한 듯하다. "혁명의 역사적이고 정치적  
인 논리에 본래적으로 내재하는 음험한 딜레마와 모순"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한 메를로 폰티(M. Merleau-Ponty)조차도 한때 그의 책 「휴머니즘과 테  
러」에서 "우리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는 서로 다른 형태의 폭력들 사이에서 다만 폭력을 선택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정권은 공통적으로 폭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삶과  
토론 그리고 정치적 선택은 항상 폭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  
며, 따라서 폭력적인 자에 대한 폭력 사용의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곧 폭  
력과 공범 행위"라고 하면서 폭력을 옹호할 정도로(정화철, 1999). 내면  
화된 폭력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

를 실천하면 분노, 원한, 증오, 복수를 철저히 배제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인  
간의 애정과 신뢰의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  
화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향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  
동에 역사는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다. 우리의 노력이 모순과 고통을 재생산하는 노력이 아니라, 모순과 고통을  
근절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노력인지에 따라서 그  
의 최도가 달라집니다.

좀 길게 인용되었지만, 비폭력주의가 어떻게 평화운동을 사회변혁운동  
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가를 간결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도법의 '설법'이 진장 현실정치에서 실효성  
을 갖지려면, 비폭력주의에 입각한 실천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향상"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역사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계 평화운동사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을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비폭력 평화운동은 갈등상황이 심각하면  
일수록 어떠한 '폭력적 수단'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하여 평화를 위한 투  
쟁을 승리로 이끈 경우가 많다. 간디가 이끈 인도의 독립과 마틴 루터 킹  
의 흑인인권투쟁, 그리고 귀족의 인위적인 삶과 특권을 거부하고 농노와 함  
게하려고 했던 톨스토이의 '절대평화주의(pacifism)'적 삶 등이 바로 그 실  
례들이다. 예수와 부처는 물론, 동서양 성현들의 비폭력 정신과 삶은 여전  
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과 내  
삶이 만나고, 나의 삶과 이웃의 삶이 만날 때, 사회는 변혁된다. 이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정신과 실천적 동력(動力)인 '비폭력주  
의'는 제도나 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자 하는 사람들의 삶과 영혼의 만남'을 통해서 공유되고, 확산되며, 그리  
고 그러한 '만남'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사회가 변혁되는 것이다.  
바로 자신의 평화와 더불어 시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평화

성을 있다는. 착한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드립(2001)도 이  
렇게 답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 수행자들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비폭력주의의 본질은, 불교의  
피해거나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폭력주의의  
의 문제를 회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 현실, 세계를 밀고  
문제가 있으면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에서도 자비심에 입각한 비폭력 평화주의의 방법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입니다.  
..... 부처님이 국가나 민족, 교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칙은 법의  
진리에 입각한 비폭력, 평화의 정신입니다. 부처님은 법의 길만이 인간의 길이  
고, 법의 길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고, 법의 길만이 희망의 길이라는 분명한 원칙  
을 갖고 살았습니다. .... 서신스님과 사명스님은 도인이고 대단한 분이지만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여지가 많  
습니다. 부처님은 분명 비구는 칼을 들고 싸워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라  
시대 원광법사의 화랑오계도 법의 길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부처님의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진리의 정신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인 비폭력 평화정신이 지켜  
지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인도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비  
폭력 평화의 방법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는다면 차라리, 인  
도의 독립을 포기하겠다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인도의 처력과 인도의 위대함  
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왜 그래야 할까요? 만일 인도가 폭력을 통해 독  
립을 얻어냈다면, 삶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향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인도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대로 영국 사람들에게 대한 증오, 분노, 원한, 복수심이 계  
속 격화되고, 또 영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을 상대로 분노, 증오, 원한, 복수심  
을 키워서 계속 악화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더 아만치 않으려  
력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와 반대로, 현대의 포용으로 비폭력 평화의 방



테만 평화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이반 일리치(Ivan Illich, 2002)의 말대로 "평화의 이전(移轉)은 전쟁"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영국 연합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때, 그들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자유'의 대가는 바로 그 "자유인"의 생명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이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자신의 팔다리를 잃고, 생명을 잃으면서, 이라크 국민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이라크 사회는 '평화'를 얻었다. 다른 모든 평화운동 방식은 다 소용없고 오히려 비폭력주의, 비폭력 평화사상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평화라는 말이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또 우리의 평화운동이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어치구니없는 '역설'을 계속해서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비폭력 평화사상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는 정신적 토양, 철학적 기반이 된다는 사실에 새롭게 주목하자는 것이다.

실로 평화운동은 다른 사람도, 사회도 아닌,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실천'이라는 의미를 띤다. 평화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막상 그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는 평화운동이라면, 그런 운동은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다. 자기 자신의 삶도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테크놀러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국제적 분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화운동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혼과 삶이 실려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평화운동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운동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에 먼저 영향을 끼친다. 자기 스스로가 먼저 감동할 수 있는 평화운동이 실천될 때, 그 평화운동은 비로소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평화운동 안에는 분노와 좌절과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평화운동가들

‘아닙니까?’

“한국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언어 사용의 관행부터 비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연이 어떨든 간에 일단 남을 죽인 사람들의 행위를 ‘의거(義舉)’로 부르는 것이 지금의 관행이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방생’의 의미에서는 차라리 선생님의 체벌을 말리려다가 자신도 체벌을 당한 학생의 행(行)을 ‘의거’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왕따’가 될 위험이 있음에도 묵하지 않는 학생, 폭력을 당함에도 ‘성 경험 고백’의 강요를 끝까지 뿌리치는 군인, 중국·인도네시아 노동자의 고향을 찢는 ‘나이키’의 제품을 사지 않는 소비자……이 모든 사람들의 ‘의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불’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까? 다른 중생—그것이 옆에 앉아 있는 학생이든 멀리 있는 중국의 노동자든 간에—이 나와 같은 줄 알고 그의 고(苦)를 자신의 몸으로 막을 원을 배워, 행으로 옮겨주면, 그 순간에 꿈에서 깨어나와 진짜 세상을 드디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02년 5월 9일, 박노자 합장

“평화 운동과 평화 운동가로 청년동맹네트워크 (시) 좋은벗들 등의 평화 운동 단체에서 2001년 12월 17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현재 경찰청 산하의 ‘자비외교’ 시민학교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mail solar4374@hanmail.net

박노자 선생은 블라디미르 티호노프,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 아시아 및 아프리카 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 경제대학교 외국어대학 러시아어과 강의 진임 강사. 현재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E-mail volody@hanmail.net

쓰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회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읽고 싶은 생각이 나는 편지를 쓸 수도록 배울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이해,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람들을 외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도 우리의 같은 인간입니다.

평화운동이 평화의 길을 보여주면서 사랑의 언어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것이 평화운동가들이 평화롭게 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움이 없이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롭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운동에 공헌할 수 없습니다.(텍사한, 1992)

참고문헌

김대중, 『이기바드기타』, 창대, 2001.

김용은, 『거오스와 불교』, 사이언스북스, 2001.

김종철, 『애지직, 자유의 삶이 필요하다』, 『녹색평론』(71), 2003, 2-23쪽.

노암 촘스키, 『실용적인 교육과 거짓말』, 이침이슬, 2000.

리처드 라마, 『삶의 네 가지 진리』, 숲, 2000.

도널드 내가 본 부처, 창대, 2001.

박노자, 『나를 배반한 역사』, 인물과사상사, 2003.

안토니스 프린츠, 『한나 아렌트』, 여성신문사, 2000.

이반 일리치, 『평화의 근원적 의미를 생각한다』, 『녹색평론』(62), 2002, 104-118쪽.

정화철,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조울스, 『만민법』, 이콜리오, 2000.

리처드 라마, 『평화로운 삶』, 창경각, 1992.

김영환, 1961년 영국 콜레스고대학교의 런던대학교 Institute of Education, 고려대 등에서 평화교과를 연구함. 저서 『새로운 학교 큰 교육 이야기』(공저), 역시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등 다수. 현재 성서대학교 교양학부(교육학) 교수.

특집 1

비폭력의 철학—적의'를 넘어서는 용기<sup>1)</sup>

김대중, 정새, 정익

데이비드 매레이놀즈

비폭력 웹 전선(Nonviolence Web Front)에 여러 회에 걸쳐 실리고 신문 특집 기사로 실리게 될 이 글은 비폭력의 기본 철학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마찰 비폭력이 단순히 하나의 테크닉인 것처럼 쓰고 말하지만 나는 그 이상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분노의(Injustice)를 변호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손쉽게 이용될 수 없으며 오직 현실 세계에서 검증되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일면성의 철학이다.

비폭력의 기본적인 가정

비폭력의 기본적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비폭력에는 절대적인 현실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제각각 그것의 일부만 본다. 아무도 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다. 현실에 대해, 지구 그 자체로 상호-현실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만일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몇몇 사람들이게 '침묵의 현실'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태양의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침묵의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겠다.

이 글은 David McReynolds의 'Nonviolence: A Practical Approach' (http://www.nonviolence.org)에 7차에 걸쳐 소개되어 있다. 데이비드 매퀴는 '침묵의 현실'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제공한다.



